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2018. 11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머 리 말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릴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IFRS 17 도입으로 자본 확충에 고심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나침판과 이정표가 없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그리고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정도가 20년 이상 앞서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일본 보험산업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고, 인구 고령화에 어떠한 대응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일본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보고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자산가격 폭락 및 버블경제 붕괴, 금융개혁, 공적보장 축소 등 일본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친 환경 변화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와 이에 촉발된 보험수요 변화 등에 일본 보험산업이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리 보험업계 준비에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8년 1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연구 배경 / 11

II. 일본 보험산업 환경 변화 / 15

1. 인구 고령화 / 15
2. 버블경제 붕괴 / 24
3. 재정 건전성 악화 / 30
4. 일본 보험산업 규제 개혁 / 35
5. 일본 공적연금제도 변화 / 45
6. 일본 공적 건강보험제도 변화 / 51
7. 보험수요 변화 / 55

III.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65

1. 보험수요 변화 대응 / 68
2. 경영 효율화 / 78
3. 공적보장 축소 대응 / 90
4. 향후 과제 / 100

IV. 결론 및 시사점 / 108

| 참고문헌 | / 111

■ 표 차례

- 〈표 II-1〉 일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연평균 임금 수준(2012년) / 18
- 〈표 II-2〉 일본 가구구조 변화 / 19
- 〈표 II-3〉 근로자 수 및 실업률 추이 / 22
- 〈표 II-4〉 상용근로자 월별 평균 근무시간 및 평균 임금 추이 / 23
- 〈표 II-5〉 상용근로자 성별·연령별 연평균 임금 추이 / 23
- 〈표 II-6〉 일반계정 수입 및 지출(2016년) 비중 / 31
- 〈표 II-7〉 일본 가계 금융자산 구성 추이 / 41
- 〈표 II-8〉 일본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집중도 / 43
- 〈표 II-9〉 일본 생명보험시장 보유계약 집중도 / 43
- 〈표 II-10〉 일본 생명보험 판매채널 비중 변화 / 43
- 〈표 II-11〉 일본 공적연금제도 변화 / 48
- 〈표 II-12〉 일본 건강보장제도 개혁 주요 내용 / 54
- 〈표 II-13〉 일본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 비중 / 61
- 〈표 II-14〉 일본 연령별 보험 수요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4년) / 62
- 〈표 II-15〉 일본 성별 보험 수요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4년) / 63
- 〈표 III-1〉 주요국 생명보험시장 규모 / 65
- 〈표 III-2〉 주요국 생명보험회사 수 / 65
- 〈표 III-3〉 일본 생명보험시장 점유율 / 65
- 〈표 III-4〉 일본 보험회사별 상품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1년) / 66
- 〈표 III-5〉 판매채널 비중 변화 / 73
- 〈표 III-6〉 보험회사별 판매채널 전략 / 74
- 〈표 III-7〉 T&D Holdings의 판매채널 전략 / 75
- 〈표 III-8〉 자산운용 수익률 / 80
- 〈표 III-9〉 자산 부채 듀레이션 / 80
- 〈표 III-10〉 회사별 자본 확충 규모 / 82
- 〈표 III-11〉 일본 탈상호회사 추이 / 83
- 〈표 III-12〉 일본 주식회사 비중 / 84
- 〈표 III-13〉 일본 생명보험산업 파산 / 85

■ 표 차례

〈표 Ⅲ-14〉 주요국 생명보험산업 ROE 추이 / 87

〈표 Ⅲ-15〉 연평균 보험료 실질성장률(2013~2016년) 추이 / 89

〈표 Ⅲ-16〉 일본 성별 요양이 필요한 기간 / 91

〈표 Ⅲ-17〉 독거노인 비중 / 102

〈표 Ⅲ-18〉 치매노인 비중 / 102

■ 그림 차례

- 〈그림 I-1〉 우리나라 인구 추이 / 11
- 〈그림 I-2〉 주요국 고령화율 추이 및 전망 / 12
- 〈그림 II-1〉 일본의 인구 통계 추이 / 15
- 〈그림 II-2〉 일본 인구구조 변화 / 16
- 〈그림 II-3〉 일본의 성별·연령별 미혼 비율 / 17
- 〈그림 II-4〉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참가율 변화 / 21
- 〈그림 II-5〉 성별·연령별 고용 형태 / 22
- 〈그림 II-6〉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24
- 〈그림 II-7〉 일본 주가 및 부동산가격 추이 / 25
- 〈그림 II-8〉 일본 환율 및 금리 추이 / 27
- 〈그림 II-9〉 일본의 세수 및 재정 적자 추이 / 31
- 〈그림 II-10〉 일본 및 주요국 정부 부채 추이 / 33
- 〈그림 II-11〉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추이 / 34
- 〈그림 II-12〉 주요국의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 추이 / 34
- 〈그림 II-13〉 일본 생명보험시장 구조 변화 / 44
- 〈그림 II-14〉 일본의 노후 보장체계 / 46
- 〈그림 II-15〉 적격퇴직연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이행 / 49
- 〈그림 II-16〉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 추이 / 56
- 〈그림 II-17〉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계약 가입 건수 추이 / 56
- 〈그림 II-18〉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 금액 추이 / 57
- 〈그림 II-19〉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 금액 / 58
- 〈그림 II-20〉 일본 생명보험회사 개인보험 보유계약 금액 / 58
- 〈그림 II-21〉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 59
- 〈그림 II-22〉 생산가능인구와 수입보험료 / 59
- 〈그림 II-23〉 일본 가구주 연령별 가구 재무 상황 / 60
- 〈그림 II-24〉 연령별 신계약 구성비(건수) 추이 / 61
- 〈그림 II-25〉 일본 성별·연령별 보험 수요 / 62
- 〈그림 II-26〉 일본 성별 보험 수요 / 63

■ 그림 차례

- 〈그림 II-27〉 개인연금 추이 / 64
- 〈그림 II-28〉 암보험 및 의료보험 추이 / 64
- 〈그림 III-1〉 일본 생명보험상품 유형화·단순화 / 72
- 〈그림 III-2〉 생명보험상품 비중(건수 기준) 변화 추이 / 72
- 〈그림 III-3〉 다이이치 생명의 판매채널 전략 / 75
- 〈그림 III-4〉 해지율 추이 / 77
- 〈그림 III-5〉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비중 추이 / 79
- 〈그림 III-6〉 이차역마진 / 80
- 〈그림 III-7〉 자본 확충 / 81
- 〈그림 III-8〉 비용 추이 / 86
- 〈그림 III-9〉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사업비 추이 / 86
- 〈그림 III-10〉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추이 / 87
- 〈그림 III-11〉 일본 생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 89
- 〈그림 III-12〉 다이이치 생명의 해외진출 전략 / 90
- 〈그림 III-13〉 은퇴 전 대비 은퇴 후 가처분소득 비율 / 90
- 〈그림 III-14〉 일본 연령별 의료비 / 91
- 〈그림 III-15〉 특별계정 자산 잔고 / 94
- 〈그림 III-16〉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 94
- 〈그림 III-17〉 의료보험 신계약 건수 / 96
- 〈그림 III-18〉 일본생명 경영전략 변화 / 97
- 〈그림 III-19〉 다이이치 생명 경영전략 변화 / 98
- 〈그림 III-20〉 다이이치 생명의 외형성장전략 / 99
- 〈그림 III-21〉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현재 및 향후 과제 / 101
- 〈그림 III-22〉 보험회사 가치창출(Value Chain)과 인슈테크 도입 현황 / 103
- 〈그림 III-23〉 Accenture 설문조사 결과(2013년) / 104
- 〈그림 III-24〉 일본생명보험회사 보유계약액과 사업비율(2016년 3월) / 105
- 〈그림 III-25〉 보유계약규모와 수익성과의 관계 / 106
- 〈그림 IV-1〉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109

Population Aging and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Korea entered the aged society in 2017, and its working age population began to decrease from 2018. The population itself is expected to decrease within 10 years.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period when the working age population is decreasing in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which experienced only its increase. This report was planned to get some intuitions from the experience of Japan.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in 2018 is similar to that of Japan in 1995. Japan entered the aged society in 1994, and its working age population has decreased since 1995.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has shown interesting phenomena since 1995.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and bubble collision have affected insurance demands in several ways. First, the insurance market has been shrunk. Insurance coverage and insurance premiums have decreased. Second, demands for insurance have been differentiated by ages and genders due to an increase in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 increase in the single family homes, and an increase in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Third, as the government financial burden has reduced public pension and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demands for individual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have been increasing. Fourth, the insurance market for the elderly population has expanded, since people ages 60 and above own more than 60% of household financial assets. Fifth, as the economy has been sluggish for a long time, wages have decreased, and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e price sensitivity of consumers has become very high. In response to such insurance demand changes,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has developed various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products. Insurance companies also have implemented channel strategies based on product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have simplified their products by merging and integrating riders to help consumers to comprehend them. The government also deregulated the insurance market regarding price, product development, scope of business, and entry, so on, which helped the Japanese insurance industry to maintain financial soundness and profitability in spite of the deterioration of business environments, such as market shrinkage and asset price bubble collapse.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basically to supply the products that the consumer needs. The Japanese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insurance demand changes and the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seems to have been effective in this respect. Korean insurance industry will also face market contraction and changes in insurance demand due to population aging.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product development, sales channels diversity, capital expansion, cost reduction, M & A, overseas expan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population aging.

요 약

I.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편, 2018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총인구도 10년 이내에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인구 Bonus)만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인구 Onus)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우리보다 20년 정도 인구 고령화가 앞선 일본의 사례를 정리함
 - 고령사회 진입: 일본 1994년 vs. 우리나라 2017년
 - 초고령사회 진입: 일본 2006년 vs. 우리나라 2025년 예상
 -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본 1995년 vs. 우리나라 2018년
 - 인구 감소: 일본 2008년 vs. 우리나라 2027년 예상
- 연구 범위는 일본 생명보험 중 개인보험과 개인연금으로 국한함
 - 2015년 일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개인보험 25조 6천억 엔, 개인연금 4조 7천억 엔, 단체보험 1조 천억 엔, 단체연금 4조 5천억 엔 등으로 개인보험과 개인연금이 80% 이상을 차지함

II. 일본 보험산업 환경 변화

-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고령화, 버블경제 붕괴, 재정건전성 악화, 금융규제 개혁, 공적연금제도 변화, 공적건강보험제도 변화 등의 환경 변화를 겪어 왔음
 -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만혼 및 비혼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2000년 27.6% → 2015년 32.6%)

- 버블경제 붕괴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저금리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우 막대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는데, 1997~2001년 일본이 금융 위기를 겪은 기간 중 7개 생명보험회사와 1개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함
-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졌으나 경기부진 지속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됨
 - 경기부진 장기화 및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근로자 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2000년 35만 5천 엔 → 2015년 31만 4천 엔)
-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었고,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은 240%(2016년)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짐
-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금융개혁을 시행함
 - 보험 관련 주요 내용은 자회사 방식으로 생·손보 상호진출 허용, 업무영역 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상품 및 가격규제 완화, 방카채널의 단계적 확대 등 판매채널 다양화, 보험계약자 보호,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임
 - 금융개혁 시행 이후 가격 및 상품 자율화 진전으로 다양한 상품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외국계 및 손보 자회사의 대규모 신규 진입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됨
 - 이들은 소비자의 충성심이 높고, 점진적인 보험료 규제 완화로 높은 사차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일본 보험시장을 매력적으로 판단함
-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본인 부담이 확대되고, 공적보장이 축소됨
 -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1994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됨
 -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경우 1984년 급여의 본인 부담이 정액 방식에서 비율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본인 부담은 10%에서 1997년 20%, 2002년 30%로 확대됨

-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급여의 본인 부담이 면제되었으나, 2008년부터 소득에 따라 10~20%를 부담함

■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보험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다양화·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남

-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과 가입 건수, 납입보험료,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 등이 1995년을 전후하여 축소됨
 - 1995년을 전후하여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독일, 체코, 핀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생산가능인구와 수입보험료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구구조 변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성별 및 연령별 보험수요가 차별화·세분화됨
 - 사망보장 중심에서 여성은 의료보험, 연금 등 본인보장 수요, 청년층 및 독신은 의료보험 등 본인보장 수요, 중·장년층(핵심소비자)은 사망보험 등 가족보장 수요, 노인층은 연금, 요양 등 노후보장 수요로 보험수요가 세분화됨
 - 공적보장 축소로 개인연금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제3분야(일본에서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을 의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남성의 경우 의료보험 및 연금 이외의 보험수요가 위축되었으나,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의료보험과 연금 이외에도 종신보험 수요가 증가함
 -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함
 - 노인인구 증가와 이들의 자산여력(60세 이상 노인층이 가계 금융자산 중 60%를 소유)으로 노인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

III.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와 보험수요 변화에 대해 일본 보험산업은 다음과 같이 대응함
- 첫째, 보험수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함
 - 1960년대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장의 사망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1970년대는 석유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로 사망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망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됨
 - 보험금중도증액제도와 계약전환제도가 도입됨
 - 1980년대는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금리자유화가 시작된 시기로 저축 수요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높은 예정이율의 개인연금과 일시납 양로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 투자형 상품으로 마케팅되어 인기를 얻었음
 -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본인 부담금 산정이 정액에서 비율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험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함
 - 1990년대의 경우 정기부 종신보험, 단순 정기보험 및 사망보장에 의료보장 특약을 탑재한 상품 공급이 확대됨
 - 버블경제 붕괴, 금리 하락, 경기 침체, 보험회사 파산, 금융개혁 등의 환경 변화로 저축 수요가 위축되었으나, 사망보장 수요는 유지되었고, 의료보장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상품 및 가격경쟁이 시작됨
 - 2000년대 들어 생·손보 결합상품이 등장하였고, 암보험 및 의료보험이 활성화되었으며, 리스크가 세분화되어 보험료에 반영되고, 무(저)해약 환급형 상품과 특약이 축소된 단순하고 저렴한 상품이 공급됨
 - 2000년대 들어 생·손보의 제3분야 진출 허용, 방카규제 철폐, 초저금리 지속, 시장경쟁 심화 속에서 공적보장이 축소됨
 - 가계의 소득 감소와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비대면채널 선호가 높아짐

- 특약이 축소되고 단순화된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세분화됨
- 여성 및 노인 수요가 확대됨
- 예정이율이 높은 외화표시보험 공급이 확대되고, 주식시장 호황 및 노후준비로 변액연금이 활성화(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됨

○ 보험시장이 축소되자 계약자 유지가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방문 확대, 영업 조직 교육 강화, 판매채널 다양화, 계약 제안에서 체결까지 업무 단순화 등 계약자 유지 노력이 강화됨

- 13개월차 유지율이 93%(우리나라 80%대 초반)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며, 해지율도 6% 이하로 낮아짐

○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게 설계사, 대리점, 내점형 점포, 콜센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전략이 시행됨

-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소비자 유형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판매채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유형에 따라 회사를 분리함
- 부가가치가 높고 컨설팅이 필요하며 복잡한 저축성 및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이이치 생명보험회사에서 공급하고, 방카채널에 적합한 저축성 상품과 방카채널과 내점형 점포 등에 적합한 보장성 상품을 각각 별도의 자회사에서 공급함

○ 이러한 결과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상품 비중에서 보유계약 건수와 가입금액 모두 양로보험 비중이 하락하고 연금, 암보험 및 의료보험 비중이 높아짐

■ 둘째, ALM 증시하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운용 전략을 시행함

○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과 주식 비중을 줄이는 한편 국채 비중을 크게 늘림

- 대출 비중은 1990년 35.5%에서 2016년 8.3%로 감소, 주식 비중은 같은 기간 22.0%에서 5.7%로 감소, 국채 비중은 4.4%에서 43.0%로 증가함
-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경우 일본(2016년): 12.3년, 14.0년, 독일(2013년): 10.0년, 20.2년, 영국(2013년): 12.0년, 11.5년, 미국(2015년): 10.5년, 11.3년 등임

○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함

- 해외채권 비중은 1990년 13.1%에서 2016년 22.7%로 확대됨

■ 셋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본 확충,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 업무 제휴 강화,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함

○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함

- 정부는 상호회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을 이익의 80%에서 20%로 축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후순위채권의 일종인 Kikin Bond 발행을 허용함

○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본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이 활발해짐

- 상호회사의 경우 내부유보 확대로 배당이 축소되었고, 계약자의 직접경영이 아닌 계약자대표에 의한 경영으로 주식회사와 경영구조가 유사해지는 등 정체성이 사라짐
- 해외에서도 주식회사 전환 및 대형화가 주된 흐름이었음

- 1997년: 상호회사 16개, 주식회사 28개, 2010년: 상호회사 4개, 주식회사 41개

○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수 합병이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를 크게 절감함

- 2000년대에 들어서기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파산 시를 제외하고 인수 합병에 부정적이었으나,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방식으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되었고, 해외에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과 규모 및 범위 경제를 위해 인수 합병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구조조정 및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인건비는 1996년 5,563억 엔에서 2010년 3,807억 엔으로, 운영비용은 같은 기간 2,632억 엔에서 1,931억 엔으로 축소됨

- 그러나 최근 들어 외형성장이 중시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업비용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양한 목적하에 기업 간 업무 연계 및 제휴가 강화됨
 - 다이이치 생명과 AFLAC 간 신규 상품 개발 및 판매채널 공유를 위해 제휴가 이루어짐
 - 다이이치 생명과 일본 우체국보험(Kampo) 간에 해외 진출, 자산관리, 공동연구 등 3개 영역에서 제휴가 이루어짐
 -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지역 진출을 확대함
 - 일본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아서 위험을 고려한 ERM하에서도 해외 진출이 유리함
 - 사차익률이 높은 의료보험시장 성장과 경영 효율화 등의 결과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 일본의 경우 사망담보의 사차익률은 30% 수준이나 암보험 및 의료보험의 사차익률은 40~50%에 달함
- 넷째, 공적보장 축소에 대응하여 연금시장, 의료 및 개호보험시장을 공략함
- 저금리로 인한 예정이율 하락으로 1990년대 중반 개인연금 수요가 위축되었으나 외국계 주도로 변액연금이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방카규제 완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형사의 변액연금 공급이 크게 증가함
 - 대부분 원금보장형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금보장에 대한 리스크 확대로 변액연금 공급이 위축됨
 - 2010년대 들어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납 연금 공급이 확대되었고, 최근 들어 톤틴성을 강화한 종신연금이 출시됨
 - 일본의 의료보험은 공공부문의 높은 보장률로 인해 의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을 보완해 주는 실손형 대신 소득보전 목적의 정액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2001년 대형사의 진입 제한 철폐 이후 급성장함
 - 일본의 경우 건강나이와 실제나이 간의 격차가 남성의 경우 9년, 여성의 경우 13년이나 되며, 이에 따라 의료비의 50% 이상이 70세 이상에서 발생함
 - 19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질병특약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

암보험이 소개됨

- 여성특약, 고도 선진의료 특약, 취업불능 보장, 정신질환 보장, 불임치료 보장, 치매 보장, 건강나이 사용, 건강증진형 도입 등으로 진화함
- 보장급부, 보험료,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회사별로도 특화된 상품을 출시함
- 의료보험시장이 성장한 배경을 보면, 공적보장 축소로 보험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원을 중심으로 한 보장설계로 상품내용이 간단하고 저렴하여 고객에게 접근하기 용이하였으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입원 일수 제한 정책과 충분한 안전할증 등으로 사차익률이 높았기 때문임

■ 다섯째,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

-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중장기 경영목표하에 보험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해외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
- 1990년대에는 재무건전성이, 2000년대에는 수익성이, 2010년대에는 외형성장이 중시되었음
 - 니폰 생명과 다이이치 생명의 경영전략을 살펴보면, 1990년대는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금리 상품의 계약전환을 통해 이차역마진을 개선하고 보장성 상품에 주력하였고, 판매채널의 고능률화를 추진하였으며, 자산운용에 있어서 주식과 대출 비중을 축소함
 - 2000년대 들어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가운데, 종합보험상품 및 의료보험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비전속채널을 확충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함
 - 2010년대 들어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 하는 등 외형성장을 중시하기 시작함
 - 차이점은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임

-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형임
- 향후 인슈테크, 초고령사회 대응, M&A 또는 해외 진출 등이 보다 중시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에서 인슈테크는 언더라이팅, 계약관리, 클레임 등에서 활용이 활발하나, 아직까지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이 미흡함
 -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 문제가 새롭게 대두됨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구매 단계, 계약유지 단계, 보험금지급 단계별로 고령계약자 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
 -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로 향후, 인수 합병을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할 것이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선택할 것이나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회사별 보유계약 금액이 100조 엔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도 발표되었고, 이 경우 40개가 넘는 생명보험회사 수가 절반 정도로 축소되어야 함

IV. 결론 및 시사점

- 보험산업의 역할은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임
 - 특히 연금과 제3분야의 경우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것임
- 일본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수요 변화 대응, 경영 효율화 추진 등 두 개의 축으로 접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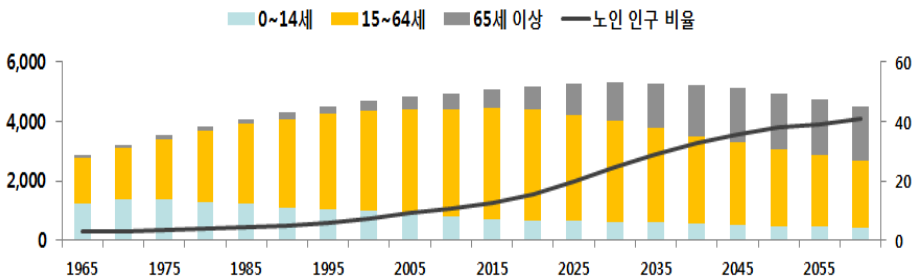
- 향후에는 인슈테크, 초고령사회 대응, M&A 및 해외 진출 등이 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보험산업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보험산업도 시장 축소와 보험수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상품 개발, 판매채널, 자본 확충, 비용 절감, M&A, 해외 진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I. 연구 배경

인구 고령화는 20세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인구학적 현상이다.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고¹⁾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 수준인 1.05명까지 낮아졌으며³⁾ 식습관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2015년생)이 남성 79세, 여성 85.2세까지 높아졌다.

〈그림 I-1〉 우리나라 인구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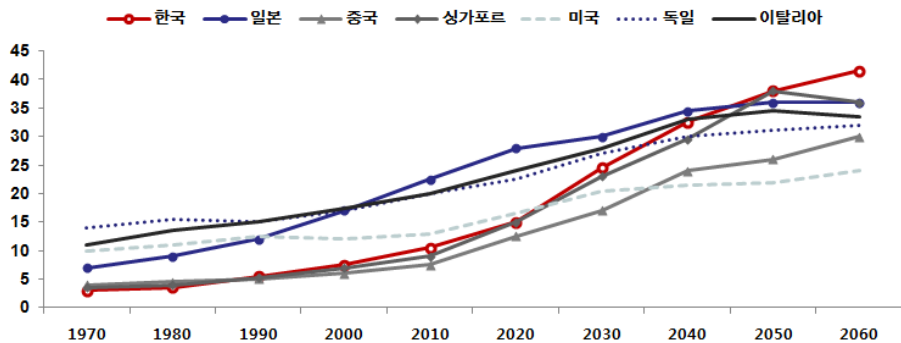
이러한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7% 이상)에,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

- 1) 모든 국가에서 유아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먼저 낮아졌음
- 2) Bloom and Luca(2016)에 따르면 전 세계 출산율은 1950년 5.0명(선진국 2.8명)에서 2015년 2.5명(선진국 1.7명)으로 하락하였는데, 선진국은 20세기 전후부터, 개도국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음
- 3)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로 보인다(〈그림 I-1〉 참조). 한편,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⁴⁾ 총인구도 2030년대 들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이보다 빠른 2027년이 될 수도 있다. 노인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6년 18.7%⁵⁾에서 2036년 47.8%로 상승하여 세계에서 8번째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⁶⁾ 특히 204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고령화율)이 현재 최고령국가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2〉 참조).

〈그림 I-2〉 주요국 고령화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사회보장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가 준비해야 하는 노후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한편, 세대 내·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다양한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

4) 고용부(2017)의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6~2021년 46만 명 감소하고 2021~2026년 172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감소폭도 점차 증가함

5) 우리나라 노인부양비율은 2016년 18.7%로 OECD 평균(25.3%)보다 낮고, 전 세계에서 53번째에 불과함

6) 전 세계 노인부양비율은 2015년 12.6%에서 210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Bloom and Luca 2016)

화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구가 늘어나는 확대지향적(인구 Bonus) 시기만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지향적(인구 Onus) 시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가설은 실증 결과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⁷⁾ 이론적 가설에만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가 앞선 국가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고령화되어 있는 국가이며,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우리나라는 일본이 경험한 변화를 상당부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를 보면 일본이 1994년, 우리나라는 2017년으로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우리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가 60세에 달하여 은퇴가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좁은 의미(1947~1949년생)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660만 명)가 2012년 65세를 맞아 은퇴하였으며, 1,000만 명이 넘는 넓은 의미(1947~1951년생)의 단카이 세대도 은퇴 연령에 도달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일본의 경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검토하는 것은 연구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으로 특히 생명보험산업, 그 중에서도 개인보험과 개인연금 등 개인대상 보험⁸⁾으로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1995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보험산업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

7)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유명한 가설중의 하나는 Mankiw and Weil(1988)이 주장한 자산가격 폭락임. 노후 소비를 위해 축적된 자산을 처분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가설임. 그러나 윤경수 외(2017)에 따르면 일본에서 60대 가구주의 총자산 및 순자산은 50대 가구주 보다 각각 23%, 30%가 더 많으며, 미국에서도 65~74세 가구주의 총자산과 순자산이 55~64세 가구주보다 각각 25%, 32%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8)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25조 6천억 엔, 개인연금 4조 7천억 엔, 단체보험 1조 천억 엔, 단체연금 4조 5천억 엔 등으로 개인보험과 개인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80% 이상임

험시장 축소 가능성과 정부 재정 부담에 따른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필요성은 보험산업에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성장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일본의 경험은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 보험산업은 지난 20~30년간 인구 고령화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첫째, 노인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구조도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만혼 및 비혼의 영향으로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났다. 둘째, 1990년대 초반 발생한 자산가격 거품 붕괴가 아직까지 일본 경제 및 금융,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진 장기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근로자 임금은 감소하였다. 셋째, 1996년부터 일본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금융 빅뱅으로 알려진 금융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격 자유화,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 등이 허용되었고, 방카슈랑스 도입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었다. 넷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후 소득 및 건강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이 개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 보험산업 변화를 살펴볼 때, 인구 고령화의 영향만을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보험수요와 보험공급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환경 변화 및 영향도 같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경제 저성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금융개혁, 가구구조 변화 등은 고령화와 별도로 논의될 수도 없다.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일본이 고령사회에 진입(1994년)하기 이전에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에 대해 어떤 준비를 시작하였는가? 둘째, 자산가격 거품 붕괴의 영향으로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보험시장도 축소되는 환경하에서 어떻게 보험산업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셋째, 보험산업은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넷째, 향후 보험산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인구 고령화, 자산가격 거품 붕괴 등 일본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설명하였다. III장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 및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IV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일본 보험산업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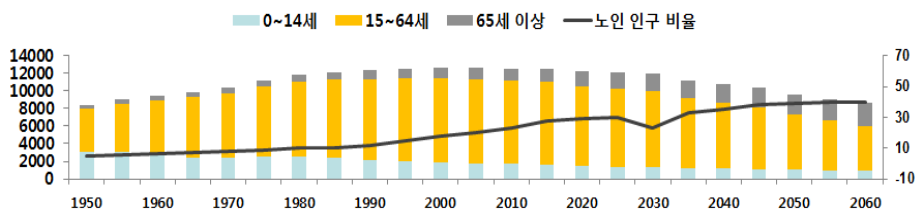
1. 인구 고령화

가. 인구구조 변화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본 인구는 1억 2,710만 명이다. 세계에서 10번째이고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2010년 인구 센서스에 비해 94만 7,000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 인구는 2060년 8,670만 명(2010년 대비 32.2% 감소)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일본의 인구 통계 추이

(단위: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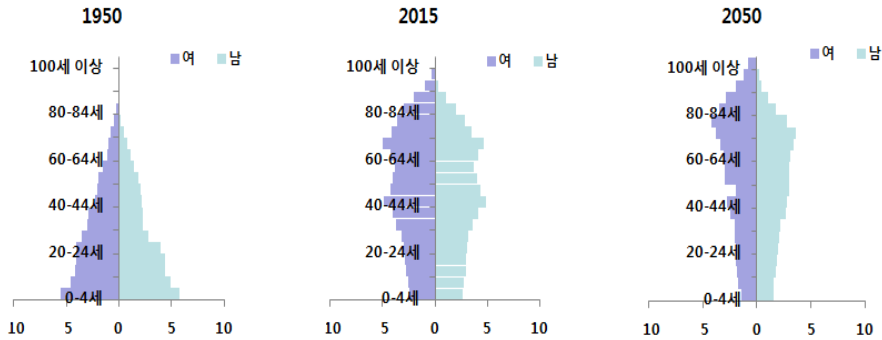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 <https://data.go.jp>

1950년 연령별 인구구조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습이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2050년이 되면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II-2> 참조).⁹⁾

9) 2015년 기준으로 노인층에서는 60세 후반의 인구가 많은데, 이들이 단카이 세대이고, 장년층에서 40세 초반의 인구가 많은데, 이들이 단카이 주니어 세대임

〈그림 II-2〉 일본 인구구조 변화

(단위: 만 명)

자료: 일본 총무성, <https://data.go.jp>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7%에 달한다. 2050년이 되면 동 비율은 3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2015년 1,586만 명¹⁰⁾으로 전체 인구의 12.7%에 불과하다. 2015년 생산가능인구는 7,59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6%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비율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¹¹⁾

일본은 1970년 고령화율이 이미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1985년에 동 비율은 10%를 상회하였고 1994년에 고령사회인 14%에 도달하였으며, 2006년에는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206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현재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빠른 인구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가 출산율 하락¹²⁾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출산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74년 2.04명을 하회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1.26명까지 감소하였는데, 2010년 1.39명, 2010년 1.46명으로

10) 199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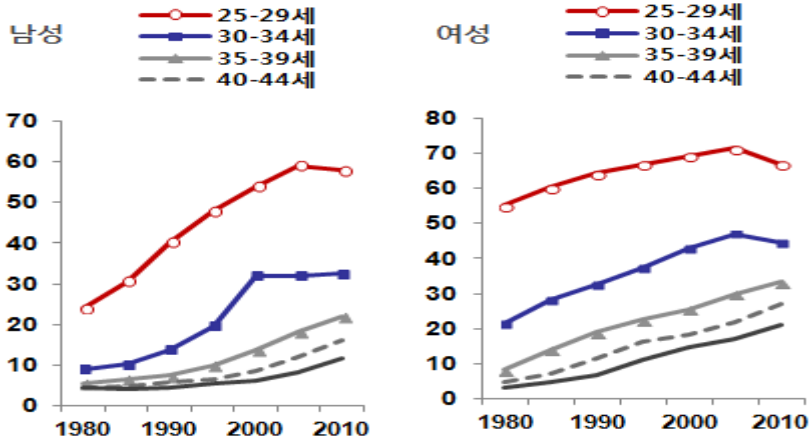
11) 일본의 15~39세 사이 인구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며, 전체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은 편임. 높은 자살률도 노동력 감소에 일조하고 있음

12) 출산율은 하락하였지만 단카이 세대의 자녀가 출산 시기를 맞은 1971~1974년 기간 중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시기를 2차 베이비 붐 시기라고 함

다시 소폭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II-3〉 일본의 성별·연령별 미혼 비율

(단위: %)



자료: 일본 총무성, <https://data.go.jp>

출산율이 낮아진 것¹³⁾은 일본 역시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것과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이전 세대보다는 적게 갖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와 30대의 미혼 비율 상승세가 멈추고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성의 미혼 비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의 경우 40%를 넘고 30대 후반의 경우에도 30%를 상회한다(〈그림 II-3〉 참조). 이에 따라 초혼 연령의 경우 남성은 1950년 평균 25.9세였으나 2010년 30.7세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23.0세에서 29.0세로 높아졌다(Kuga 2013).

NHK 설문 조사에 따르면 1993년에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60%가 동의하였으나 2003년에는 동 비율이 50%로 낮아졌다. 2004년 아사히신문의 설문 조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즐거움이나 부담이나에 대해 44%가 부담이라고 응답하였다. 양육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줄고 소득이 감

13) 첫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임. 첫출산 연령은 1970년 25.6세에서 2015년 30.7세로 높아졌음(일본 총무성 2017)

소했기 때문이다(Kuga 2013).

일본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더 높다.¹⁴⁾ 특히 20대의 경우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25~34세 사이의 결혼 적령기의 경우 2010년 현재 여성은 39.5%, 남성은 15.7%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1985년 16.4%였으나, 2007년 33.5%로 상승하였다(일본 총무성 2017).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높은 연령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진다(〈표 II-1〉 참조).

〈표 II-1〉 일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연평균 임금 수준(2012년)

(단위: 만 엔)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24세	281.6	204.8	274.4	200.3
25~29세	348.0	237.3	331.5	226.8
30~34세	404.6	251.4	362.5	233.5
35~39세	463.7	255.1	392.3	235.7

자료: Kuga(2013)

인구 고령화의 또 다른 원인은 수명 연장이다. 일본의 경우 기대수명은 1950년 남성 57.7세, 여성 61.0세에서 2014년 각각 80.5세, 86.8세로 늘어났으며, 2060년에는 각각 84.2세, 90.9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총무성 2017).

한편, 좁은 의미(1947~1949년생)의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2012년 65세를 맞아 퇴직하였는데, 이들은 660만 명에 달한다. 이보다 넓은 의미(1947~1951년생)의 단카이 세대는 1,000만 명이 넘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은퇴하여 일본 노동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가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4) Kuga(2013)에 따르면 연령별 결혼 비율은 연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가구구조 변화

경제 발전 및 도시화 진전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가구구조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2017)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가구 수는 5,188만 개에 달한다(〈표 II-2〉 참조). 이중에서 32.6%가 1인가구이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가구가 57.3%이다. 2000년 1인가구는 27.6%였고 핵가족가구는 58.3%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인가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고,¹⁵⁾ 3세대가 같이 동거하는 전통가구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¹⁶⁾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5명에 달하였던 가구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 3.4명에서 2015년 2.4명이 되었다. 가구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구 수는 2019년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일본 총무성 2017).

〈표 II-2〉 일본 가구구조 변화

구분	가구 수 (백만 개)	가구원 수 (인)	1인가구 (%)	핵가족가구 (%)	노인가구(1인가구) ¹⁾ (%)
1970	30.3	3.4	-	-	-
1980	35.8	3.2	-	-	-
1990	40.7	3.0	-	-	-
1995	43.9	2.8	-	-	29.1(17.2)
2000	46.8	2.7	27.6	58.3	32.2(20.1)
2005	49.1	2.6	29.5	57.7	35.1(22.4)
2010	51.8	2.4	32.4	56.4	37.3(24.8)
2015	51.9	2.4	32.6	57.3	41.5(26.3)

주: 1) 노인가구중 1인가구 비중임
자료: 일본 총무성(2017)

- 15) 결혼율이 낮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1인가구 비중 증가의 원인임.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연간 100만 쌍 이상이 결혼을 하였고 결혼율(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도 10이 넘었으나, 2015년 결혼율이 5.1로 낮아졌음. 초혼 연령은 2015년 남성 31.1세, 여성 29.4세로 지난 20년간 각각 2.6년 및 3.1년 높아졌음. 이에 반해 1,000명당 이혼 건수는 1970년 1에서 2015년 1.8로 높아졌음
- 16) 전통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임. 이에 대해 사생활(Privacy)은 보통재(Normal Goods)인데(Costa 1997; Engelhardt et al. 2005),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인층의 소득 증대 등으로 사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핵가족화가 진행된 것으로 설명됨(Engelhardt et al. 2005)

일본 가구구조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II-2) 참조).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비중은 1995년 29.1%에서 2015년 41.5%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와 함께 노인가구 중 1인가구 비중도 1995년 17.2%에서 2015년 26.3%로 높아졌다. 노인가구 비중 증가 및 1인 노인가구 증가는 III장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신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산업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경기부진 지속과 여성의 대학 진학을 상승¹⁷⁾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수가 외벌이 가구 수를 1990년대 중반부터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외벌이 가구 수는 1980년 111만 개에서 2010년 80만 개로 줄어 들었으나 맞벌이 가구 수는 같은 기간 61만 개에서 101만 개로 늘어났다(일본 총무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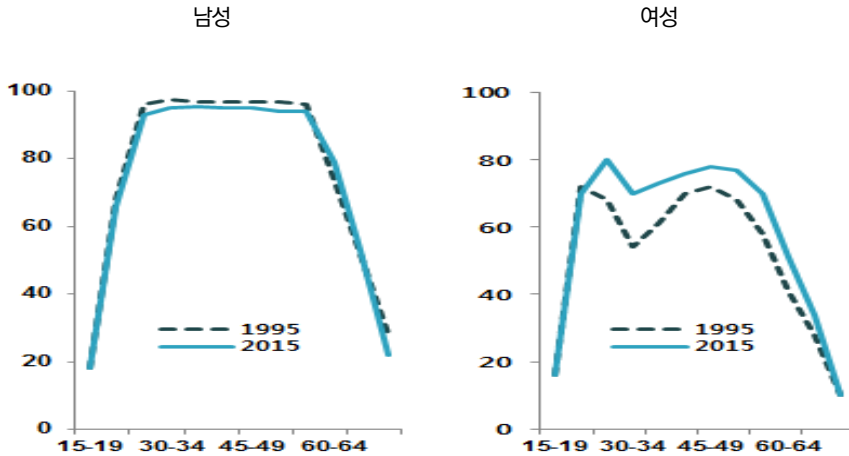
다. 노동시장 변화

노동시장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명확하게 보인다(그림 II-4) 참조). 남성의 경우 1995년 이후 청장년층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55세에서 65세 노인층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경제 부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에서 노동시장참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30~34세 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높아지는 M자형 모습이 나타난다.

17) 일반적으로 여성의 교육기간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경우 대학졸업자 비율이 남성의 경우 1967년 20.5%에서 2011년 56.0%로 상승하였고, 여성도 같은 기간 4.9%에서 45.8%로 높아졌음(Kuga 2013)

〈그림 II-4〉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참가율 변화

(단위: %)

자료: 일본 총무성, <http://data.go.jp>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2015년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71.2%로 1995년에 비해 17.5%p 높아진 가운데 30~34세 연령층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낮아진 정도가 1995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 2017). 일본 정부도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이 직장and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아베노믹스에도 이에 대한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2015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중 57.3%가 근로자이다. 〈표 II-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 수는 2000년 6,446만 명에서 2012년 6,27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6,376만 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남성 근로자는 2000년 3,817만 명에서 2013년 3,61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3,622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여성 근로자는 2000년 2,629만 명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5년 2,754만 명이다. 이 기간 중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고 남성 근로자 수가 정체됨에 따라 젊은층 실업률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2015년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3% 초반대를 보이고 있다.

〈표 II-3〉 근로자 수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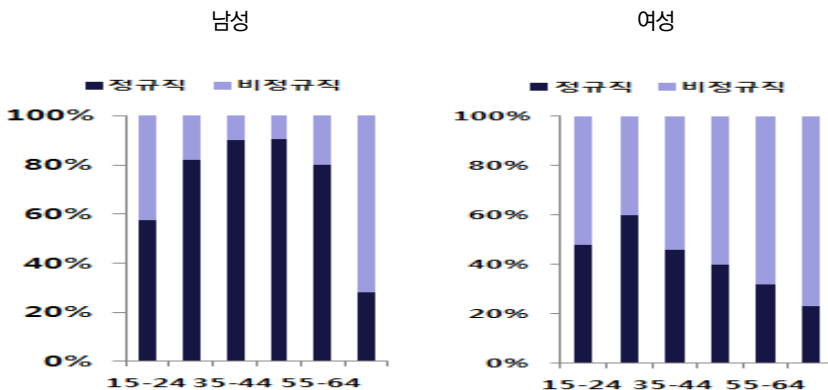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근로자 수	실업률	근로자 수	실업률	근로자 수	실업률
2000	64,460	4.7	38,170	4.9	26,290	4.5
2005	63,560	4.4	37,230	4.6	26,330	4.2
2010	62,980	5.1	36,430	5.4	26,560	4.6
2012	62,700	4.3	36,160	4.6	26,540	4.0
2013	63,110	4.0	36,100	4.3	27,010	3.7
2014	63,510	3.6	36,210	3.7	27,290	3.4
2015	63,760	3.4	36,220	3.6	27,540	3.1

자료: 일본 총무성, <http://data.go.jp>

고용 형태를 보면 부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규직은 2000년대 들어 감소하였다. 시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7.5%가 비정규직인데 남성은 21.9%, 여성은 56.3%가 비정규직이다(일본 총무성 2017).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25~54세 연령층에서 10%를 조금 넘고 55세 이후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높으며 가장 낮은 연령층은 25~34세인데 40%에 달한다(〈그림 II-5〉 참조).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기술 발전 및 근무환경 변화로 여성과 노년층에 적합한 직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일본 총무성 2017).

〈그림 II-5〉 성별·연령별 고용 형태

자료: 일본 총무성, <http://data.go.jp>

2013년 이후 근로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평균 임금도 2013년 이후 감소 추세가 멈춘 정도이다(〈표 II-4〉 참조).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화 약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단카이 세대의 은퇴 등으로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

〈표 II-4〉 상용근로자 월별 평균 근무시간 및 평균 임금 추이

(단위: 시간, 천 엔)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근무시간	154	150	146	146	145	145
임금	355	335	317	314	317	314

자료: 일본 총무성, <http://data.go.jp>

2001년과 2011년의 상용근로자의 성별·연령별 연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연령층에서 연평균 임금이 10~20%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줄어들었다(〈표 II-5〉 참조).

〈표 II-5〉 상용근로자 성별·연령별 연평균 임금 추이

(단위: 만 엔)

구분	남성		여성	
	2001	2011	2001	2011
20~24세	298.2	270.4	284.0	285.0
25~29세	411.8	352.6	372.2	368.9
30~34세	556.4	424.0	476.4	431.2
35~39세	692.6	506.1	606.0	493.0
40~44세	809.4	595.6	681.7	613.7
45~49세	910.6	704.2	795.9	733.2
50~54세	1033.1	773.3	920.8	841.7
55~59세	1040.3	805.9	976.3	790.6

자료: Kuga(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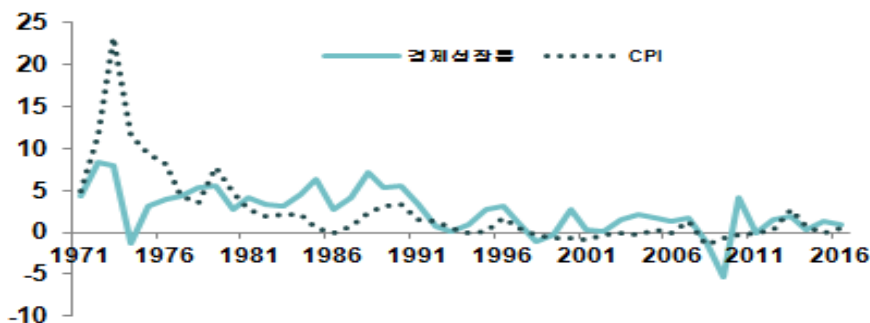
2. 버블경제 붕괴

가. 경제 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1980년 이전(고도 성장), 1980년에서 1990년대 초반(버블 발생 및 붕괴),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잃어버린 20년)까지 등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 II-6>에서도 나타나듯이 1980년 이전에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1974년 역성장(실질기준)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던 시기였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높았다. 이에 따라 명목경제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컸다. 1980년대 들어서는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명목경제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경제성장률도 1980년대 이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평균적으로 4~5%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저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특히 디플레이션 발생으로 실질경제성장률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베노믹스¹⁸⁾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남에 따라 다시 명목경제성장률이 실질경제성장률보다 높아졌으나, 실질경제성장률이 회복되는 모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그림 II-6〉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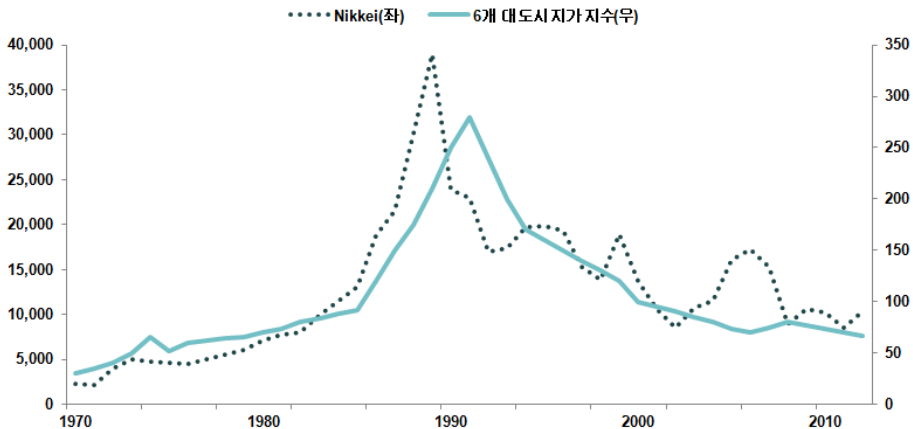
18)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됨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본 총무성 2017). 1980년대 이전까지 일본 경제는 일본 국민의 높은 저축률과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졌다.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일본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통상마찰이 잦아졌으며,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이어져 미 달러화에 대해 엔화 가치가 50% 절상되었다. 플라자 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기¹⁹⁾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원되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는 엔화 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었고, 실업률도 낮았으며, 설비투자도 활발하였다. 엔화가치 절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기업 이익도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표상으로 모든 것이 양호하였다.

〈그림 II-7〉 일본 주가 및 부동산가격 추이

(단위: 엔, pt)



자료: 전용식 외(2014)

19)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수입을 늘리는데 미국과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도 이루어졌음

대내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됨에 따라 주가와 부동산 가격²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버블이 형성²¹⁾되었다. 금융규제 완화도 버블을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들어 예금 금리가 점진적으로 자유화되고 회사채 발행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고 예대금리 차이도 축소되어 은행 수익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다. 1980년대 말 자산가격 버블²²⁾을 우려한 일본 중앙은행이 마침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였고 주가는 1990년 들어, 부동산 가격은 1991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하였다(그림 II-7) 참조).

일본 경제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된 이후 경제성장률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경제(GDP) 성장률은 캐나다 2.7%, 프랑스 2.3%, 독일 1.4%, 이탈리아 2.7%, 미국 3.2%, OECD 2.7%, 한국 5.3%였는데, 일본의 경우 1.2%에 불과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데, 여전히 내수는 부진하였고 수출 증가에 의존한 것이었다. 2008년 들어서 일본 경제 경기 회복세가 다시 멈추기도 하였다. 이것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영향 때문이었다. 더욱이 2008년 9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수출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9년 4월부터 해외수요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일본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는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약화시켰다.

자산가격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엔화의 가치는 1998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아베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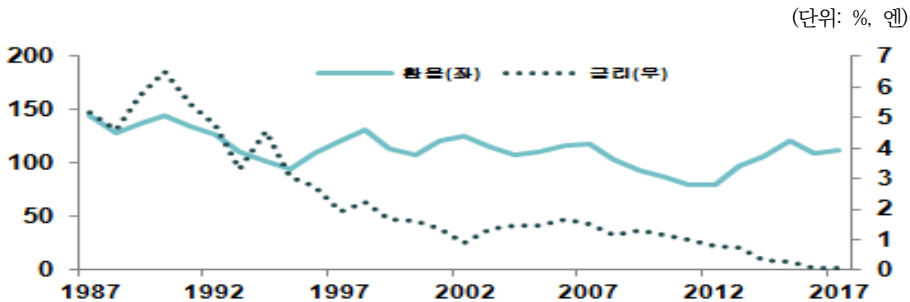
20) 일본의 세제도 대출을 통한 부동산투자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였음. 일본 상속세의 경우 5억 엔 초과 한계세율이 75%였는데, 부동산가치는 시가의 50%만이 인정되었고, 대출은 전액 인정되었음. 따라서 부유층은 차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음. 부동산 매각 이전까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한 개인에게도 이자 부담이 소득공제 되었음. 재산세 역시 0.1%에 불과하였음

21) Deckle(1991)은 당시 금융완화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환위험으로 인해 해외자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일본 국내 자산에 투자됨에 따라 자산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자산가격은 거품이 아니라 시장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2) 1987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본의 경우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등 거품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음

믹스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절상되어 왔다. 내수 부진에 의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엔화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였다. 즉,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내수 부진과 내수 부진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가 엔화를 강제로 유지시켰으며, 이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었고,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10년 만기)도 1% 이하로 낮아졌다(〈그림 II-8〉 참조).

〈그림 II-8〉 일본 환율 및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 이제 20년이 되었는데, 초기 10년에 비해 후기 10년의 경우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장기간 부진을 보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먼저 일본 정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일본 총무성 2017). 첫째, 자산가격 버블 붕괴의 결과로 나타난 은행대출의 대규모 부실이 경기부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둘째, 경기부진이 심리적인 면에서 투자와 소비 위축²³⁾을 가져왔고, 투자와 소비 위축이 경기를 더욱 부진하게 만들었다.

학자들은 이보다 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Koo 2008; Takahashi 2011: 전용

23) 일본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부채조정으로 인해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와 다른 주장도 최근 들어 등장하였음. IS 커브가 수직 선이 되어 소비와 투자가 통화정책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Naoyuki(2017)에 따르면 첫째, 자산가격 급등 시 늘어난 부채를 거품 붕괴 이후 상환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이 저축을 늘렸기 때문에 저금리에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무관함. 둘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둔화되었고, 이와 함께 Basel의 자본규제로 창업회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어 혁신과 기술진보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임

식 외 2014). 첫째, 주가 및 부동산 거품 충격이 지속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시행되었다. 셋째, 199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가 일본의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을 낮추었다. 넷째,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으로 정부 부채만 크게 늘어나 재정정책 효과가 미미하였다. 다섯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역시 일본 경제의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였다. 일곱째, 종신고용 등 유연성이 떨어지는 일본의 고유한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IT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구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율이 상승하여 저축 및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tines et al. 2005).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세대보다 저축을 늘리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다면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Bloom et al. 2001).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1인당 교육투자가 늘어나 인적자본 축적으로 노동의 질이 향상되면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상쇄될 수도 있다(Fourgere and Merette 1999). 일본 内閣部(2000)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10~2020년 연평균 1.5%, 2020~2035년 1.4%, 2035~2050년 1.2%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금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연금 및 금융자산으로 생활하는 노인인구의 정치적 파워 증가(Vlandas 2016)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 상승,²⁴⁾ 노동투입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저축률 상승(Sudo and Takizuka 2018) 등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Sudo and Takizuka(2018)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G7 국가에서 노인부양비율과 실질금리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실증분석 결과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실질금리가 640bp 하락하였는데, 이 중 270bp가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고령화로 노인층의 정치적 파워가 확대되는데,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정책을 지지함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 소위 3개의 화살로 묘사되는 아베노믹스를 실행하였다. 첫 번째 화살은 공격적인 통화정책이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를 물가안정목표로 정하고 질적 및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하여 통화량을 2배 늘렸다. 두 번째 화살은 신축적 재정정책이다. 10조 엔에 상응하는 긴급경제부양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 화살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정책이다. 이러한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디플레이션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경제성장률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윤성훈·한성원 2018).

나. 금융위기 발생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 붕괴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였으며, 부동산 의존도가 크게 높았던 일본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왔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해짐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997년 들어 일부 은행이 파산하였고 1998년과 1999년 정부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 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²⁵⁾

1997년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은 자산가격 버블 붕괴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회계 및 감사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Fukao(2004)에 따르면, 다쿠쇼구은행은 1997년 3월 결산에서 3,000억 엔의 자본을 보유하고 이익을 기록하였으며 배당금도 지급하였는데 1998년 3월 결산에서는 자본 잠식이 1조 2,0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이치 증권회사는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2,600억 엔의 손실을 숨겼는데, 동 규모는 자본금의 절반에 해당했다. 문제는 일본 재무성이나 일본은행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 및 감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예금인출(뱅크런)이 촉발되었다.

보험회사 역시 버블 붕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산가격 급등 시기를 이

25) 2001년까지를 시한으로 1998년 「금융재건법(Financial Revitalization Act)」과 「은행자본화충법(Bank Recapitalization Act)」도 시행되었음

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높은 예정금리의 저축성 상품 공급을 확대하였고, 높은 예정이율을 부담하기 위해 주식과 대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였는데, 자산가격 폭락 이후 막대한 이차역마진으로 파산하게 되었다. 닛산생명(1997년), 토호생명(1999년), 다이하쿠생명(2000), 다이쇼우생명(2000년), 치요다생명(2000), 교에이생명(2000), 도쿄생명(2001) 등 7개 생명보험회사가 막대한 부실로 인해 정리되었다.²⁶⁾ 이차역마진은 대형 생명보험회사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저축성 상품 비중이 낮았고 사차익이 높아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Yoneyama 2017).

3. 재정 건전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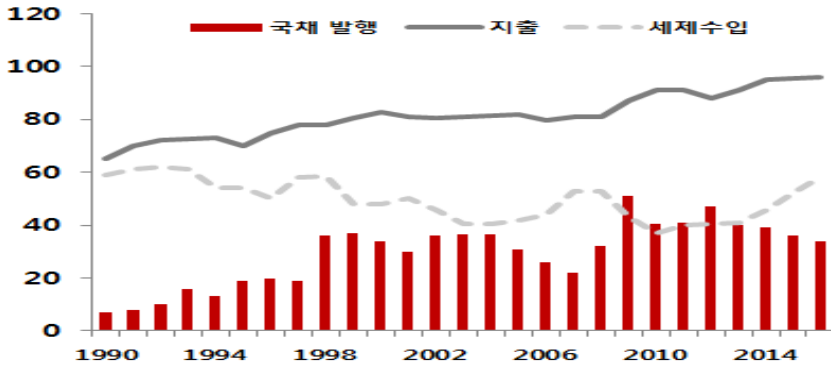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정부 재정은 일반계정(General Account), 특별계정(Special Account), 그리고 정부부속기관(Government-Affiliated Agencies)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계정을 통해 사회복지, 공공사업, 문화·교육, 국방 분야에 정부 예산이 지출된다. 특별계정은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계정과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특별계정 수는 매년 바뀌는데, 2016년 14개가 설립되었다. 정부부속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본금융공사(Japan Finance Corporation), 일본국제공사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rporation) 등이 있다.

정부 지출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그림 II-9〉 참조). 특히, 2008년 이후 경기 침체로 조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 수입과 지출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2009년 이후 국채 발행 규모가 조세 수입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조세 수입이 다시 차입보다 많아졌다.

26) 일본 보험회사 부실은 III장에서 별도로 설명함. 자세한 내용은 武田久義(2008) 참조함

〈그림 II-9〉 일본의 세수 및 재정 적자 추이

(단위: 조 엔)



주: 1) 2016년은 예산안을 고려하여 추정함

2) 일부 특별계정 제외함

자료: 일본 총무성, <https://data.go.jp>

일반계정 규모는 2016년 96조 7,200억 엔이다. 동 규모는 GDP의 18.6%에 해당한다.

〈표 II-6〉 일반계정 수입 및 지출(2016년) 비중

(단위: %)

지출	일반지출						부채상환
	사회보장	지방정부	공공사업	교육과학	국방	기타	
	33.1	15.8	6.2	5.5	5.2	9.8	24.4
수입	조세수입				국채		기타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기타			
	18.6	17.8	12.6	10.6	35.6		4.8

자료: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일반계정 중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은 사회보장(33.1%)이며, 그 다음으로 정부 부채 원리금 상환(24.4%), 지방정부 지원(15.8%), 공공사업(6.2%), 교육과학(5.5%), 국방(5.2%) 순이다. 2016년 정부 수입을 보면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이 49.0%를 차지하고, 이 밖에 다른 종류의 수입을 합쳐도 정부 지출의 59.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표 II-6〉 참조).

지방정부 재정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기초계정(Ordinary Account)과 공공

사업계정(Public Business Account)이다. 기초계정에서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감당한다. 공공사업계정에서는 공기업, 국민건강보험, 후기노인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지출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의 수입 구성은 거의 매년 일정하다. 2013년 지방세가 35.0%, 중앙정부 지원이 17.4%를 차지하였다(일본 총무성 2017).

일본의 경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2009년 이후 재정 적자가 조세 수입을 초과하였고, 재정 지출의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일반계정의 누적 부채 규모는 2012년에 1,000조 엔에 달하며, 국채²⁷⁾ 발행 잔액도 2022년 1,000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총무성 2017). 정부 부채가 확대된 것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결과²⁸⁾이나, 막대한 정부 부채 규모로 인해 재정 유연성이 낮아지고 경기부양 효과도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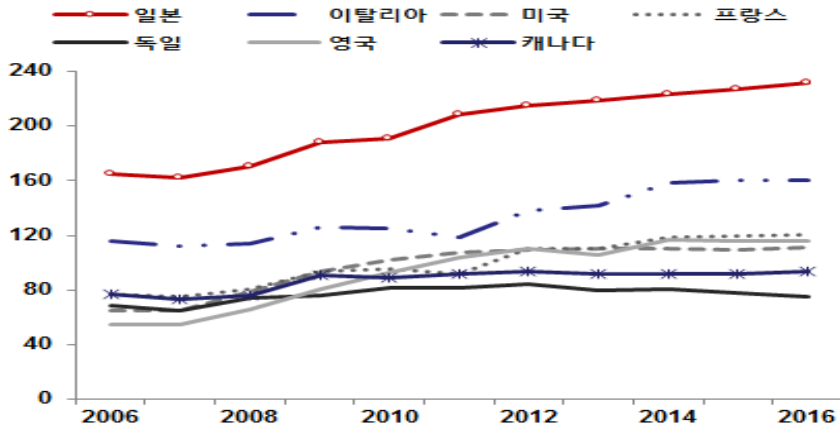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989년 14.4%에서 1999년 100%, 2013년 245%로 높아졌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II-10〉 참조). 그런데 일본의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부채의 95%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금융기관들은 국민의 저축을 예금(부채)으로 조달하여 국채에 운용하고 있다(일본 총무성 2017). 따라서 사실상 국민들의 저축이 재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재정위기 가능성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7) 국채는 Construction Bond, Deficit-Financing Bond, Reconstruction Bond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Construction Bond는 1966년 Showa 40(1965년) 경기침체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발행되었음. Deficit-Financing Bond는 1975년 오일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발행되었음. Reconstruction Bond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행되었음

28) 잃어버린 20년간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가 후퇴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경기에 대한 판단을 성급히 함에 따라 재정정책이 일관되게(확대 및 축소 반복) 추진되지 못하여 정부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전용식 외 2014)

〈그림 II-10〉 일본 및 주요국 정부 부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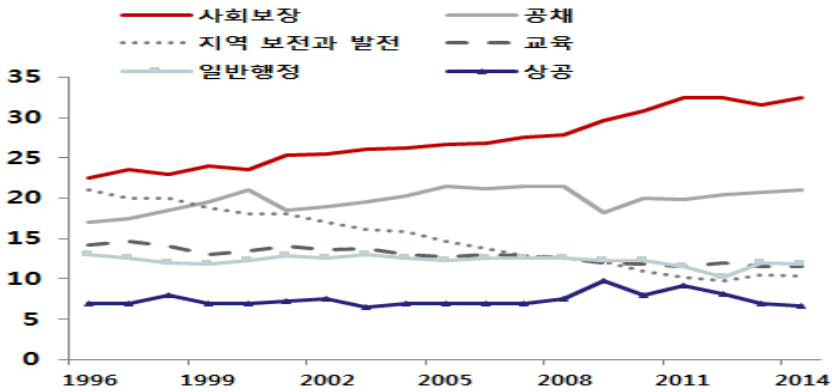
자료: 일본 총무성(2017)

일반계정 지출과 조세 수입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인데, 현재 부양비율 증가를 고려할 때 조세 수입이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부양비율이 1990년 전후 가장 낮은 0.44명이었으며, 동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0.61명으로 늘어났다. 사회보장 및 정부 부채 원리금 상환이 정부지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재정 지출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으며,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경제의 유효수요 역시 인구 감소 및 부양비율 상승 등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성 예산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11〉 참조).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1961년 정부지출 대비 4.9%이었으나 1985년에는 13.7%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31.4%, 2016년 33.1%까지 높아졌다. 사회보장 지출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적 연금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노인층에 대한 지출이 사회보장 지출의 70%를 차지하였다. 2013년 공적연금의 경우 사회보장 지출의 49.3%였다. 의료비 보장은 사회보장 지출의 32.0%였다. 사회보장 지출의 82.3%가 공적 연금 및 의료비 보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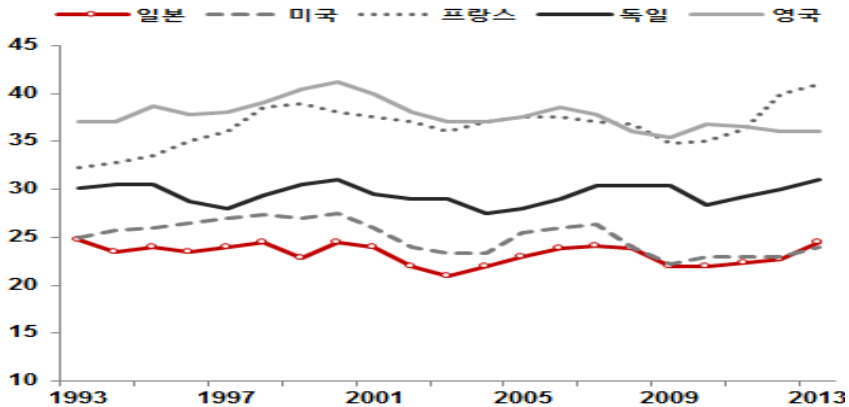
〈그림 II-11〉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총무성, <https://data.go.jp>

〈그림 II-12〉 주요국의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총무성(2017)

한편 일본의 조세 부담률은 아직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그림 II-12〉 참조). 국민소득 대비 조세(국세 및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8.3% 였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989년 27.7%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 조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동 비율은 2003년 21.2%로 낮아졌다. 2014년 17년만에 처음으로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데 힘입어 2016년 현재 동 비율은 26.1%(국세 15.9%,

지방세 10.3%)로 높아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보험산업 규제 개혁

가. 금융 규제 개혁 이전²⁹⁾

일본 보험(민영)산업의 시초는 1890년에 설립된 동경해상보험회사(유한책임회사), 1881년에 설립된 메이지생명보험회사(주식회사)이다. 동경부 지사의 인가를 받았으며, 면허제는 아니었다. 또한 1890년에 제정된 (구)상법에서는 경영 및 회계 분리를 조건으로 생·손보 겸영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난립하였고 경쟁 심화로 다수의 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이에 따라 1899년 (신)상법(현행 상법)에서는 보험산업은 타 업종과의 겸영뿐만 아니라 생·손보 겸영도 금지되었다. 1900년 (구)보험업법이 제정되어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와 주식회사로 제한되고, 면허주의 및 기초서류 인가에 의해 감독되며, 타 업종 및 생·손보 겸영 등이 금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해외자산 포기, 정부보증 중단 등으로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부실해지자 부실계약을 제외하고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었고, 건전한 계약 및 신규 계약을 신설된 회사가 인수하였다. 이 때 신설된 회사는 14개사이며 이 중 13개사가 상호회사였다. 이후 생명보험산업은 상호회사 16개사, 주식회사 4개사 등 20개사 체계가 외자계 세존생명보험회사가 진입한 1976년까지 유지되었다.

일본 생명보험의 요율은 평준보험료 방식을 따랐고, 순보험료는 생명표와 책임준비금 규제에 의해서, 부가보험료는 예정 사업비 규제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요율 규제는 보험회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계약자배당 역시 재무성의 승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경

29) 日本 生命保險協會 100年史, 한낙현·김도훈·이규훈(2006), Swiss Re(2013) 등을 요약·정리하였음

우 독점금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았음에도 보험요율 및 약관이 사실상 모든 회사가 동일하였다(한낙연·김도훈·이규훈 역 2006).

가격 및 상품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경쟁은 판매 활동 등 영업력에 좌우되었다. 이 당시 보험회사의 목표도 이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계약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경영진은 외형이 확대되면 파산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믿었다(Yoneyama 2017). 설계사 수와 수입보험료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였고,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형 보험회사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이 높아지고 소형 보험회사는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요율 규제가 지적되었다(Yoneyama 2017).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생명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 가격 인하 승인을 요청하더라도 정부는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야 가격 인하를 승인하였다. 새로운 상품 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낮은 가격의 상품이 승인될 때까지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일종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생명보험시장의 구조 및 회사 경영전략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 높은 자산수익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격적으로 저축성 상품³⁰⁾을 판매한 것이다. 기대와 달리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이러한 보험회사는 이차역마진의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1997년 이후 파산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보험요율이나 약관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의 보험산업 규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완화될 수 밖에 없었다(이기형·장기중 1998). 첫째,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공제 등과 경쟁이 심화되었다. 둘째, 자산가격 폭락 이후 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져, 자산운용 측면에서 금융업권 간 경쟁 역시 치열해졌다. 금리는 1980년대부터 이미 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었다. 셋째, 금융산업 효율화와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는 보험산업 역시 천편 일률적인 상품 공급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쟁원리를 보험

30) 이들은 주로 개인연금에 집중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예정이율이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2%p 이상 높았음

시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비가격경쟁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떨어트렸고 금융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넷째, 외국계 금융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간 업무 영역을 철폐하여 종합금융상품 공급이 필요하였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금융업권간 구분이 약해지고 금융업권 간 인수·합병이 진전되면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었고, 이들이 일본 내 지점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본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미국 등의 압력에 의한 보험시장 개방 및 일본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금융제도가 금융 자유화라는 국제적 체계와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나. 금융 규제 개혁 이후

일본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1994년 10월 미국과 일본 간의 보험협상합의에 따른 조치(Measures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Japan regarding insurance)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³¹⁾ 합의된 내용을 보면, 첫째, 보험업 면허 및 신상품, 요율의 인가기준이 행정 절차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표될 것, 둘째, 규제 완화 및 자유화를 통해 경쟁 및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것 등이었다.

일본 정부는 동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1996년 4월 1일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미국과의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 ① 규제 완화, 자유화 추진에 의한 경쟁의 촉진, 사업의 효율화, ② 보험의 건전성 유지, ③ 공정한 사업 운영의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이기형·장기중 1998). 또한 1996년 12월 15일 미국과 일본 간의 보험협상합의 보완조치(Supplementary Measures)도 타결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주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제3분야에 대한 자회사 참여 등이었다(이기형·장기중 1998).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 조치를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경제 및 사회제도를 변혁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1996년 11월 하시모토총

3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0)

리의 발의에 의해 금융개혁을 시작하였다.³²⁾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금융 자유화 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은행, 증권, 보험산업에서 시장경쟁이 강화되지는 않았었다(Ikeo 1995; Hoiruchi 1999). 심지어 Noguchi(2010)는 일본 금융제도가 1940년대 시스템이라고 비판하였고, Malcom(2001)도 일본의 금융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고 형식면에서 미국 제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개입과 감독으로 일본의 금융기관은 현상 유지적 성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APEC 2017). 이에 따라 일본의 금융개혁은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미국 등의 시장개방 압력에 의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이기형·장기중 1998).

2001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된 금융개혁의 슬로건은 'Free, Fair and Global Financial System'이었으며, ① 과정의 투명화,³³⁾ ② 시장원리 작동,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국제화 선점,³⁴⁾ ③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④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 정부 주도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후기 경제발전모델³⁵⁾이 정착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Tsukagoshi 2002; Toya 2006; Aronson 2011).

1996년 보험업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7월에는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가 4년에 걸친 보험산업 자유화 일정을 제출하였다. 금융개혁 중 보험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첫째, 진입규제가 투명화되고 자회사 방식을 통해 생·손보 간 상호진출이 허용되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산업 면허심사기준을 필요 최소한의 자산상황, 수지전적

32) 일본 금융시장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일본 엔화의 국제화를 위해 금융시장의 기능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으며, 활성화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33) 재무성의 권한이 새로 설립된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과 독립성이 보장된 일본 은행(Bank of Japan)으로 분산되었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행정지도가 2000년에 중단되었으며, 공개된 협의과정을 거친 모범규준으로 대체되었음. 또한 미국식 비조치의견서가 2001년에 도입되었음

34) 외국 금융기관에 의해 일본 금융시장이 국제화되기 이전에 일본 자국 금융기관에 의해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전의 국제화는 일본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나 외국 금융기관이 일본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쪽 방향만의 국제화였음(Malcom 2001)

35) 자본시장 중심의 경제발전모델을 의미함

36) 이하 내용은 이기형·장기중(1998), 일본 생명보험협회 100년사, 한낙현·김도훈·이규훈(2006), 米山高生(2009)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서, 인적 기준 및 사회적 신용 등으로 명확히하였다. 제3분야³⁷⁾에 대한 격변완화조치(Safe Guard)³⁸⁾를 두었고 완전 자유화는 2001년 1월에 이루어졌다. 한편, 로이드보험과 같은 특수법인도 면허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상호진출이 자회사 방식으로 가능해졌다.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된 이후 생명보험회사 중 6개 회사가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하였고 손해보험회사 중 11개 회사가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생·손보 간 상호 진출은 교차 마케팅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98년 4월 1일부터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³⁹⁾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도 인정되었다. 지주회사는 1998년부터 시행되는 독점금지법 개정에 따라 50년만에 허용된 것이다.

셋째, 상품 및 가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손해보험의 신상품 요율이나 기존상품 요율 변경 시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고제⁴⁰⁾가 도입되었다.

넷째,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었다. 먼저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보험중개인은 보험대리점과 점영할 수 없으며, 배상의무 등이 부과되었다. 또한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다.⁴¹⁾ 방카슈랑스는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2001년 4월)에서는 자회사나 계열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한하여 주택대출과 관련된 화재보험과 신용생명보험 판매가 허용되었다. 2단계(2002년 10월)에서는 개인연금 보험(법인 계약 제외), 저축성 보

37) 제3분야에서 생·손보가 취급하는 의료보험상품이 비슷해짐에 따라 제3분야에 대한 생·손보 본체의 상호진출도 허용되게 되었음

38) 2001년까지 외국계 보험회사의 주요 상품 판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형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자회사의 의료 및 암보험시장 진출이 금지되었음. 이는 제3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국계 보험회사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인데 미국계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39)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부동산회사 등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으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는 공공질서와 규범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음

40) 보고제 대상 보험은 ① 대규모 기업물건과 관련된 보험, ②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보험, ③ 전문적인 지식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등임

41) Konishi et al.(2016)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도입이 일본 은행의 이익(ROA 및 ROE) 변동성을 높였으나, 부실 가능성이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험 등이 허용되었다. 3단계(2005년 12월)에서는 일시납 종신보험(법인 계약 제외), 일시납 양로보험(법인 계약 제외), 저축성 생존 보험, 일시납 종신보험(법인 계약), 일시납 양로보험(법인 계약), 월납양로보험(보험 기간 10년 이하) 등이 허용되었다. 마지막인 4단계(2007년 12월)에서는 정기보험, 월납종신보험, 월납양로보험(보험 기간 10년 이상), 의료 및 개호보험 등 허용됨에 따라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통신판매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2001년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험업무의 대리에 보험계약체결의 대리가 추가되었다.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의 대리점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가 설립한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모집인을 겸영하고, 반대의 경우에도 생명보험모집인은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생·손보의 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모회사의 판매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소비자 역시 생·손보 상품의 동시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후 생·손보 간 상호 대리점이 되는 등의 업무 제휴가 많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자본을 보유하는 지급여력 제도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보험계약자보호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적기시정조치도 도입하였다. 업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자유로워짐에 따라 규제체계가 상품 및 가격 규제에서 건전성 규제로 바뀐 것이다.

Toya(2006)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금융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성숙된 경제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첫째, 금융자산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회복지 부담 문제가 완화될 것이고, 둘째, 자본시장을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며, 동경이 국제 경쟁을 통해 리딩 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규제 완화 이후 1990년대 높은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금융 개혁 이후에도 이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Aronson 2011). 예를 들면, 금융 개혁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당시 1,200조 엔에 달하는 민간의 막대한 저축이 투자될 기회가 제공될 것으

로 기대되었으나, 금융 개혁 이후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가계의 금융자산 중 저축과 현금
 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0.1%에서 2009년 54.9%로 오히려 더 커졌다. 동 비중
 은 미국의 경우 14%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험 및 연금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4%에서
 27.0%로 늘어났다(표 II-7) 참조). 이에 반해 주식 및 유가증권 비중은 1995년 11.5%
 에서 2009년 7.1%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동 비중이 31.4%에 달하였다(Aronson 2011).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더 집중된 것이다.

〈표 II-7〉 일본 가계 금융자산 구성 추이

(단위: 조 엔,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9
현금/예금	482(47.4)	630(50.1)	751(54.1)	769(50.7)	798(54.9)
채권	64(6.3)	74(5.9)	48(3.5)	40(2.7)	42(2.9)
주식/유가증권	172(16.9)	144(11.5)	107(7.7)	197(13.0)	103(7.1)
투자신탁	34(3.4)	29(2.3)	34(2.4)	52(3.4)	55(3.8)
보험/연금	212(20.8)	319(25.4)	378(27.2)	391(25.8)	393(27.0)
기타	53(5.2)	61(4.8)	70(5.1)	67(4.4)	62(4.3)
합계	1,017	1,256	1,389	1,517	1,453

자료: Aronson(2011)

이러한 이유(Toya 2006)는 첫째,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된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주식시장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 부진으로 실
 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1997년 이후 일본 기업들은
 시간제 또는 임시직 고용 비중을 늘리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셋
 째, 일본 국민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었다. 미국에서 1990년대 가계의 주
 식 비중이 확대되던 시기는 전통적인 DB형 퇴직연금이 줄어들고 401(k) 및 다른 DC형
 퇴직연금이 늘어나던 시기였다.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계의 주식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1년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을 제공하고 있다. 현
 노인 세대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과 보험 등 개인의 준비만으로도 노후소득에 큰 문
 제가 없다. 따라서 노후소득을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넷째,

정부 부채 확대에 의해 정부는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여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지기가 어려웠다.

주식시장 부진과 기업의 부채조정 등으로 인해 회사채시장과 벤처캐피탈시장이 성장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동경 금융시장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금융시장으로 키우는 데도 실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금융개혁은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PEC 2017). APEC(2017)은 이에 대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고, 금융개혁이 글로벌화 측면에서 많이 늦게 추진되었으며, 충분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금융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Ito and Melvin(1999)은 일본과 미국의 자본조달 비용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인 금융개혁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Aronson(2011)⁴²⁾은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은행 중심적이지만 시장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법적 및 행정적 장애물이 제거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APEC(2017)은 금융개혁이 일본 금융기관의 현상유지적 성향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금융개혁 이후 보험산업은 이전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되었다(Souma and Tsutsui 2005). 金鎔(2017)은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의 집중도 및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였는데, 시장 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II-8〉, 〈표 II-9〉 참조).

먼저 수입보험료의 경우 상위 10개사의 집중도가 1995년 81.6%에서 2015년 73.7%로 낮아졌으며, 허핀달지수도 같은 기간 949에서 779로 하락하였다. 보유계약 역시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위 10개사의 보유계약 집중도는 같은 기간 86.8%에서 76.6%로, 허핀달지수는 1,067에서 963으로 떨어졌다.

42) 금융 규제 개혁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조치는 2001년 이후 시작하였음.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금융개혁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초점을 두어야 했음(Hoshi and Patrick 2000). 따라서 금융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001년 이후 조치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표 II-8〉 일본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집중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집중도	상위 1사	18.7%	19.8%	22.4%	17.1%	21.3%	16.1%
	상위 3사	44.0%	44.4%	49.2%	39.7%	46.9%	39.3%
	상위 10사	81.9%	81.6%	85.9%	71.2%	78.2%	73.7%
허핀달지수		993	949	1,091	774	1,009	779

자료: 金璫(2017)

〈표 II-9〉 일본 생명보험시장 보유계약 집중도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집중도	상위 1사	20.9%	20.4%	22.7%	22.3%	20.8%	19.3%
	상위 3사	49.4%	48.4%	53.7%	56.3%	52.4%	47.3%
	상위 10사	88.4%	86.8%	91.6%	87.3%	81.7%	76.6%
허핀달지수		1,110	1,067	1,267	1,312	1,140	963

자료: 金璫(2017)

규제 완화 이후 몇몇 생명보험회사는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탈상호회사를 결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판매채널 전략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연금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간단한 보험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였다. 金璫(2013)은 판매채널이 설계사 중심에서 얼마나 다양화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II-10〉 참조). 설계사 비중은 1997년 88.5%에서 2012년 68.2%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리점과 통신판매 비중이 각각 8.2%p, 2.9%p 증가하였다.

〈표 II-10〉 일본 생명보험 판매채널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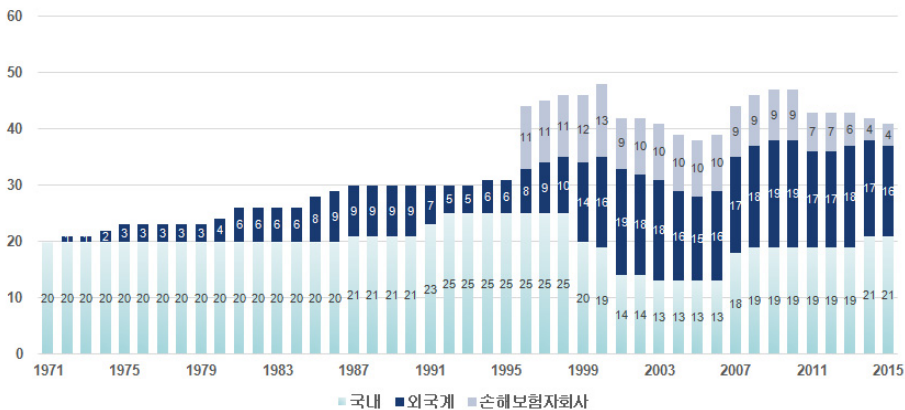
구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영업직원	89.1	88.0	88.5	77.6	71.8	66.3	68.1	68.2
통신판매	0.3	0.7	0.6	3.3	5.7	9.1	8.7	8.8
은행·증권	1.5	1.9	1.2	1.3	1.7	3.3	2.6	4.2
대리점	3.4	2.9	4.0	8.8	6.7	7.0	6.4	6.9
기타	5.5	6.5	5.7	9.0	14.1	14.3	14.2	11.3

자료: 金璫(2013)

금융 국제화 필요성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 역시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해졌다. 회계기준도 국제적 기준으로 부합되도록 개선되었다. 많은 해외 생명보험회사가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연이은 파산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와 손해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자회사가 일본 보험시장 진출을 확대(〈그림 II-13〉 참조)한 것(Urushibata 2003)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일본 보험시장을 매력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째, 이들은 일본 소비자의 경우 충성심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둘째, 보험료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경우 높은 사차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대규모 일본 국내시장으로 인해 장기투자가 가능하였다.

〈그림 II-13〉 일본 생명보험시장 구조 변화

(단위: 개)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그런데 이들은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채널보다는 전통적인 대면채널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보험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일본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였고, 당시 컨설팅방식의 판매방식이나 변액연금 등 일본에 없었던 판매방식이나 상품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Sony생명이나 Prudential생명은 보험뿐만 아니라 재무, 법률, 세금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한 상품으

로 타보험회사 고객을 공략하였고, Aetna생명은 대만에서 성공한 설계사 경력관리 시스템(Career Agent System)을 도입하였다. ING는 변액연금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Axa Dantai생명은 자산운용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였다.

5. 일본 공적연금제도 변화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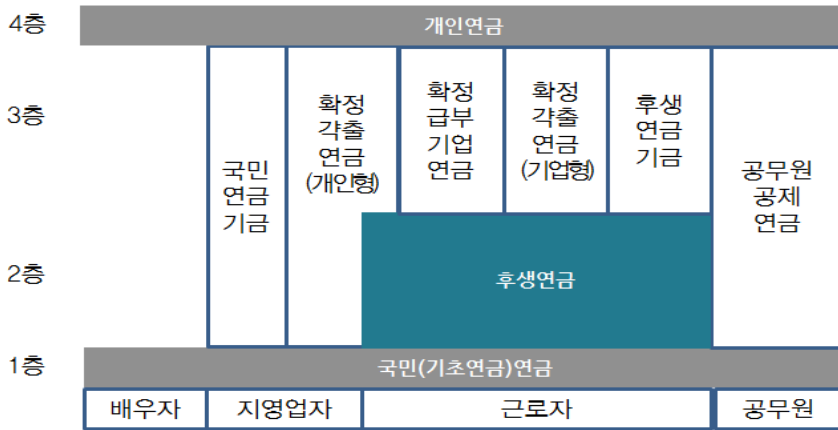
일본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1층의 국민연금(기초연금), 2층의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직역연금)의 공적연금, 그리고 3층의 후생연금기금 등의 퇴직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연금을 추가할 경우 4층 구조이다. 공적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공무원은 공제연금)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은 20~59세의 근로자를 비롯하여 자영업자 및 실업자 등 국민 모두가 가입대상이고, 정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충족하면⁴⁴⁾ 65세부터 정액 급여가 지급된다. 후생연금은 70세 이하의 민간근로자(공제연금은 공무원)가 가입 대상이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또한, 노사가 납입액의 50%를 부담하는 소득비례연금이다(기준 소득의 9.150%). 퇴직연금은 적격퇴직연금과 확정기여(DC)형 및 확정급부(DB)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다시 기업형 연금과 개인형 연금으로 나뉜다(〈그림 II-14〉 참조).

43) 이하 내용은 한낙현·김도훈·이규훈(2006), 김양희·김은지(2010),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을 참조하였음

44) 보험료는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는 정액 보험료임. 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보험료 면제기간≥25년'을 만족하면 65세부터 급여가 지급됨

〈그림 II-14〉 일본의 노후 보장체계



자료: Sekiguchi(2015)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제도로써 가장 먼저 후생연금제도가 1942년 민간기업의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1954년 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공무원공제조합(1948년)과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1954년) 등의 공제연금도 마련되었다. 1961년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에서 소외된 자영업자, 농림어업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에는 고용자의 배우자도 임의가입이 허용되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의 1/2은 현재 가입자가 부담하고 1/2은 정부가 지원한다. 급여방식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Pay-As-You-Go)이나 적립방식도 일부 혼합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제1호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매월 정액의 보험료⁴⁵⁾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가입자나 미납자 문제가 발생한다.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 피보험자를 제2호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과 다르게 보험료가 정률제⁴⁶⁾이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45) 2010년 월 15,100엔이며 매년 증가하여 2017년 이후에는 16,900엔(2004년도 가격으로 2018년 현재 16,340엔임)으로 고정되었음. 40년을 납부하면 2018년 현재 노령연금을 연간 779,000엔 수령함. 60세부터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동 금액의 70%, 70세 이후부터 받기를 원할 경우 동 금액의 142%를 수령하게 됨

46) 2009년 15.74%이며 매년 0.354% 인상되어 2017년 이후에는 18.30%로 고정되었음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배우자이다. 그러나 연수입이 130만 엔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 제3호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배우자가 가입해 있는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1970년대까지 개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정착되었는데,⁴⁷⁾ 이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고,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였으며, 연금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는 1985년 기초연금 도입 및 1994년 이후 모수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였다(김양희·김은지 2010).

1994년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연령을 남성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65세로, 여성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65세로 조정하였다. 후생연금의 경우 정액부분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65세로, 여성의 경우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65세로 높였다. 기초연금 거출금을 제외한 소득비례부분의 경우 세전 임금에 연동이 되어오다가 1994년 10월 이후 세후 임금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1999년에는 후생연금의 지급 비율을 인하하고 소득비례 부분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1년마다 280엔씩 늘어나 2017년 이후 16,340엔으로 고정되도록 하였고, 후생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2004년 9월 13.5%에서 매년 0.354%씩 인상하여 2017년 이후 18.3%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급여 수준은 2004년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되었으나, 2004년 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매크로 경제슬라이드)를 도입하여 신규 연금급여액은 1인당 세후 임금 인상률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소득비례부분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2025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의 경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였다.

연금재정을 보면 기초연금의 경우 재원의 1/3을 국고에서 부담하다가 2004년 개혁으로 1/2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후생연금의 경우 2004년 이전에는 '단계보

47) 공적연금 수령액은 일본 경제의 높은 성장기간 동안에 보험료 인상없이 증액(1964년: 1만 엔 → 1969년: 2만 엔 → 1973년: 5만 엔)되었고, 1973년에는 연금액이 임금과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지수연동시스템이 도입되었음

험료방식'으로 보험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였으나, 2004년 연금개혁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수준을 고정하는 '보험료수준고정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5년에 한번 재정 상태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였다.

〈표 II-11〉 일본 공적연금제도 변화

연도	주요 내용
1942	· The workers pension insurance act 제정 - 1944년 The employees' pension insurance act로 변경
1954	· The employees' pension insurance act 개정
1961	·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제도 도입
1965	· 후생연금 1만 엔 · Employees' pension fund 도입
1966	· 부부 국민연금액 1만 엔
1969	· 후생연금 2만 엔, 부부 국민연금 2만 엔
1973	· Price Indexation System 도입, 급여 재평가 - 후생연금 5만 엔
1985	· 전국민대상 기초연금(Basic Pension System) 도입 · 납입기간 최대 40년까지 확대, 연금액 조정 · 제3호 피보험자 · 장애연금 개선 ·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후생연금 확대 · 여성의 후생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2000년까지 55세에서 60세로 조정
1989	· Full Automatic Price Indexation System 도입 · 국민연금 학생 가입 · National Pension Fund 설치 - 지역형 National Pension Fund 설치 및 기업형 National Pension Fund 설치 조건 완화
1994	· 2013년까지 후생연금의 정률 부분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조정 · 급여평가제도 변경 · 유족연금 개선 · 육아휴직 시 후생연금보험료 면제 · 상여금 기준 특별 보험료 도입
1996	· JR, JT, NTT 등 공기업의 상호공제조합을 후생연금제도로 이관
2000	· 2025년까지 후생연금의 비례부분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 · 65~69세 근로자에 대해 후생연금 납입 확대 · 특별 보험료 폐지, 상여금에도 동일한 보험료 적용 · 육아휴직 시 사용자 부담 면제
2001	· 농협, 수협 등의 상호공제를 후생연금으로 이관
2004	· 연금보험료 상승률 18.3%로 고정

자료: 김양희·김은지(2010) 일부 정리함

한편, 퇴직연금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⁴⁸⁾ 퇴직연금제도는 전후 고도 경제성장으로 퇴직자 수와 퇴직금에 대한 지불 금액이 급속히 증가하여 퇴직금의 지불부담 평준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1962년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적격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조건(적격요인)이 충족된 기업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이다. 1966년에는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한 후생연금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기업이 후생연금기금이라고 하는 공법인을 설립하여 후생연금의 일부를 정부 대신 지급하고, 기업 형편에 따라 추가 급부를 실시하여 종업원에게 보다 두터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기초연금의 재정 악화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퇴직연금제도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의 통합, 퇴직급부에서의 연금비중 확대와 일시금 축소 등이 연금 개혁의 초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확정급부기업연금법과 확정기여연금법 제정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의 선택이 확대되었다. 적격퇴직연금은 2002년 4월부터 신규 설립이 중지되었고, 실질적으로 2012년 3월 폐지되었다. 폐지된 적격퇴직연금은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기여연금, 중소기업퇴직공제제도로 이행되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종업원 수급권 보장 강화와 수탁자 책임이 확립되었다.

〈그림 II-15〉 적격퇴직연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이행



자료: 김명중(2012)

48) 일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이상우·오병국(2012), Sekiguchi(2015)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2012년에는 자산운용규제와 재정운용 방향성 검토 목적으로 ‘후생연금기금 등의 자산운용 및 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대책본부’와 ‘유식자회의’가 설치되었다. ‘유식자회의’ 논의 내용은 퇴직연금 운용가이드라인의 수정과 자산관리운영체제 강화,⁴⁹⁾ 기업 연금 예정이율 변경, 급부 삭감, 해산기준 수정, 적립금 부족에도 제도상으로 해산하기 힘든 후생연금제도의 방향성 확립 등⁵⁰⁾이다.

2015년에는 기존의 확정급부(DB)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변형한 ‘제3의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되었다. 연금자산 운용 리스크를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리스크 분담형 퇴직연금’이다. 기업이 기본 분담금 외에 대규모 자산운용 손실에 대비하여 연금부채를 초과한 특별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적용범위 확대와 자산운용 체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DC형 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의 핵심은 개인형 DC제도 가입범위 확대, 투자교육 강화, 자산운용 체계 개선, 디폴트 옵션제도 개선 등이다. 가입 범위는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전업주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개인형 DC제도 추가 가입을 허용하였다.

투자교육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계속 교육의 법적 지위를 기존 배려의무에서 한 단계 높은 노력의무로 변경하였다. DC형 제도의 분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의무운용 폐지, 상품 수 제한 등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였다. 기업에게 운용상품의 분산투자 효과가 가능하도록 조합하는 노력의무를 부여하였는데, 2002년부터 DC형제도의 디폴트 옵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편중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49) 수탁자 책임 명확화, 운용수탁기관의 선임 및 평가, 기금의 거버넌스 및 정보 개시 등임

50) 이 밖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에의 가입, 정보제공과 사전 및 사후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이 논의됨

6. 일본 공적 건강보험제도 변화⁵¹⁾

일본은 1961년부터 사회보험방식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진행에 따라 2000년 개호보험 및 2008년 후기고령자건강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강제가입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혼합진료⁵²⁾를 금지하며 환자 본인부담급여율은 연령별 차등 적용 및 상한액(본인부담 정률제)을 두고 있다. 관리주체는 중앙행정기구인 후생노동성과 지방행정기구인 지방후생국이며, 다보험자 제도로 보험 유형별로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의 국민건강보험 대부분의 조합이 의약품 부족 및 의료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1959년 들어 신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고, 1961년 4월에는 전 국민보험체계가 실현되었다.

1973년에는 노인 의료비가 무료화되고 급부율이 70%로 인상되었으며, 고액요양비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을 둔화, 정부 재정 부담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1983년 2월 노인보건법이 시행되었고 1984년 10월에는 노인의 경우에도 10%의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퇴직자 의료제도, 특정요양비제도가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보조 축소, 의료비 개정에 의한 의료비 인하 등도 추진되었다. 한편, 2000년 4월에는 고령자가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은 각사업소에 고용되는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자, 농민 등 피용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다.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는 강제적용피보험자, 임의포괄피보험자 및 임의계속피보험자 등이 있다. 강제적용피보험자는 건강보험법 제13조 사업의 사업소, 국가 또는 법인사무소 중 상시 5인 이상 고용하는 곳의 피보험자이다. 임의포괄피보험자

51) 일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한낙현·김도훈·이규훈(2006), Otomo(2007), 이창우·이상우(2010), 村上賢二(2014), WHO(2018) 등을 참조함

52) 혼합진료 금지란,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진료하지 못함을 의미함

는 건강보험법 제13조 사업소 이외의 사업소에 고용된 피보험자이다. 임의계속피보험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당시 보험자의 피보험자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와 건강보험조합 등이 있다. 건강보험조합은 피보험자를 상시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소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건강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자이다. 보험급부는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와 피부양자에 대한 급부가 있고, 급부율은 2003년 4월부터 피보험자 본인 및 피부양자 모두 70%이다. 70세 이상 피보험자는 요양급부에 필요한 비용의 10%를 부담한다. 요양에 관한 부담금 등의 액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또는 일부가 고액 요양비로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조합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조합은 같은 종류의 사업 및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명 이상이 조직한 법인으로 도·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급부율은 70세 미만은 70%, 70세 이상은 90%이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이다.

개호보험제도는 가족수발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요개호자⁵³⁾의 자립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와 노인의료로 나뉘어져 있던 기존 제도를 재편성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⁵⁴⁾ 보험자는 지자체이며, 40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65세 이상인 자를 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4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하여 제1호 피보험자 급여대상자는 요개호자, 요지원자(요개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제2호 피보험자 급여대상자는 초기 치매, 뇌혈관장애 등 노화 관련 질병에 따라 개호 등이 필요해진 자로 한정한다. 이용자 부담 10%를 제외한 재정의 50%는 세금으로, 나머지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피보험자는 지자체에 설치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 여부와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시설 및 재가 급여를 이용하게 되며,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급여 및 식비, 거주비 등을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개호보험 수급자의 증가 및 급여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개

53) 개호(케어 또는 수발과 유사한 의미)가 필요한 자를 의미함

54)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호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시행하였음

호보험제도의 급여정책 방향은 시설급여 → 재가급여 → 개호예방급여로 이동해가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노인보건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실시되었고, 특히 1973년은 노인의 자기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복지원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인의료비가 급증하자 재정 부담이 확대되었고, 이에 정부는 1983년부터 노인보건법안을 시행하여 노인의료제도를 별도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인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1986년에는 국민의료비의 1/4이 노인의료비였다.

의료기술 발전과 고령사회 급진전 등으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노인보건제도⁵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4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⁵⁶⁾ 건강보험자로부터의 후기고령자지원금(40%), 국고보조금(50%), 일부본인부담금(10%)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어 건강보험 각 법에 의한 요양급여와 동일한 급여가 제공된다. 그런데 고령자의 재정적 부담 증가(연령차별 논란), 담당의사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제도의 전면 개정 혹은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고령화의 주요 특징은 기대수명으로 인한 후기 고령자 증가와 사회적 보호 노인의 증가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5) 1982년 법률 제정을 통해 1983년 2월부터 시행됨

56) 노인보건제도 및 퇴직자건강보험제도는 국고부담 및 건강보험 각출금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고령화 진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표 II-12〉 일본 건강보장제도 개혁 주요 내용

연도	주요 제도 변화	비고
192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면시행(1927)	정부관장건강보험의 근거법
193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국민건강보험의 근거법
1939	선원보험법 제정	선원보험의 근거법
1947	연간소득제한 폐지, 노재급여 폐지	-
1949	공무원공제조합법 제정	공무원공제조합의 근거법
1953	일용직고용자 건강보험법 제정 - 급여기간을 3년으로 연장	-
1954	정부관장건강보험에 국고부담 도입	-
1961	국민개보험(전국민 보험제도) 시행	1958년 개정
1963	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
1972	노인복지법 개정	-
1973	노인의료무료화 제도 실시	지자체 고령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대납 방식
	고액요양비제도 창설	-
	정부관장건강보험 국고보조 정률화	-
	가족 보험급여율 70%	-
1977	상여금에 대한 특별보험료 징수	-
1981	가족 입원보험급여율 80%	-
1983	노인보건제도 실시	노인의료비 억제, 국고 부담없이 보험자 간 부담
1984	국민건강보험사업(시정촌)내에 퇴직자의료제도 도입	고령이 되는 시기에 퇴직으로 인 해 국민건강보험에 전입함으로써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구조적인 불균형 발생
	100% 급여 폐지 및 본인부담 10% 도입 일용고용자 건강보험제도 폐지	본인부담을 통해 과잉수진 방지 및 수익자 부담
1986	노인보건제도 개정 - 일부부담 인상 - 가입자분배율 인상 - 노인보건시설 설치	-
198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보험기반 안정제도의 도입 - 고액의료비 공동사업의 강화 - 고액의료비 시정촌의 안정화 계획 - 노인의료비 국고부담의 삭감	저소득층 및 고령자의 가입이 많 음에 따라 일반 피보험자의 부담 증대 의료비의 지역격차에 의한 보험 자 간의 재정상의 불균형 해결
1991	노인보건제도 개정 - 일부부담인상 - 노인방문간호 창설 - 개호 공비부담 인상	-

〈표 II-12〉 계속

연도	주요 제도 변화	비고
1992	의료보험심의회 설치	-
1994	보험급여체계의 개선 - 간병간호/개호 폐지 - 재택의료 명확화 및 방문간호 확대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
1997	노인보건제도 개정 - 일부부담 인상 근로자 대상 본인부담 20% 인상(기존 10%) 외래약제에 대한 일부부담비율 도입	저성장, 보험료 수입 악화
2000	개호보험제도 실시	-
2001	노인보건제도 개정 - 외래약제 일부부담 폐지	-
2002	본인부담 30% 인상 상여금에 보험요율 부가 고령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노인의료의 대상연령 75세로 상향 조정	재정부담 확대
2006	의료제도 개혁 관련법 제정	-
2008	노인보건법 폐지,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도입 고령자 자기부담비율 세분화 실시	고령자보험을 2가지로 분리 * 65~75세 미만 전기고령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2013	70~74세의 의료비부담 10%로 인하	-
2014	진료수가, 약가 개정	진료수가 전체의 0.1% 인상 약가 약 0.58% 인하

자료: 이창우·이상우(2010); 최병호 외(2005); WHO(2018) 등에서 발췌

7. 보험수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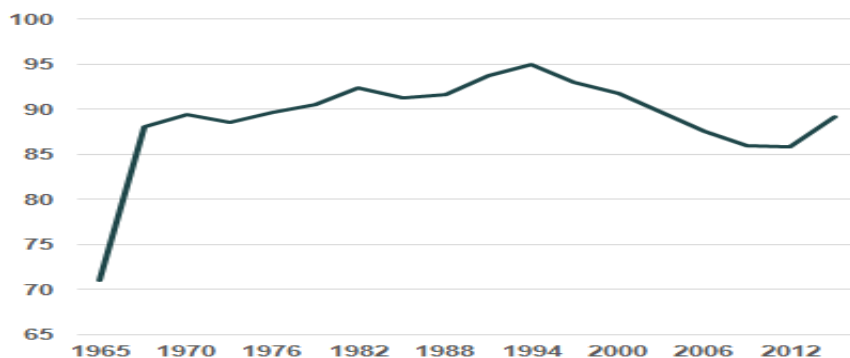
1970년대 및 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핵가족화가 진행되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났다.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가 저출산과 비혼 및 만혼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1994년이며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버블경제 붕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이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보험수요가 크게 변화하였다.

가. 보험수요 위축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을 보면(〈그림 II-16〉 참조), 일본의 경우 이미 1980년대 들어 90%를 넘어섰으며, 자산가격이 폭락하던 1990년대 초반에도 상승하였으나 1994년 95%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들어 하락세가 멈추었고 반등하고 있다.

〈그림 II-16〉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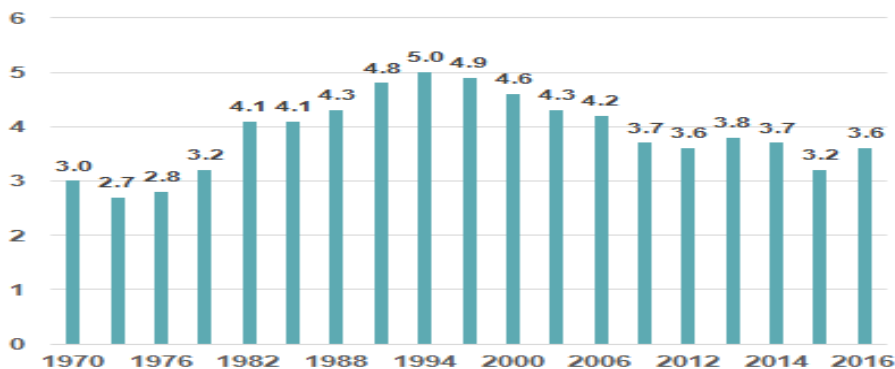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그림 II-17〉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계약 가입 건수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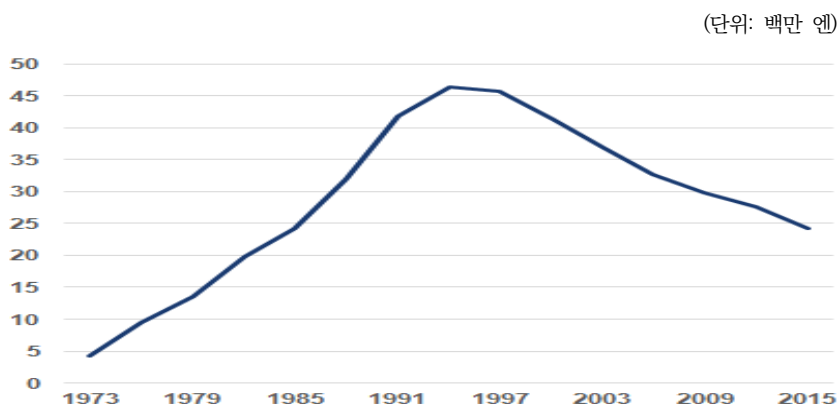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가계의 생명보험 보유계약 건수(〈그림 II-17〉 참조)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들어 가구당 보유계약 건수는 4건을 넘었고, 1994년 5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소득 정체 또는 감소와 함께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평균 가구 구성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 금액(〈그림 II-18〉 참조)도 1994년 4,535만 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5년 현재 2,423만 엔으로 줄어들었다. 가구원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지만 보험수요가 양로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서 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18〉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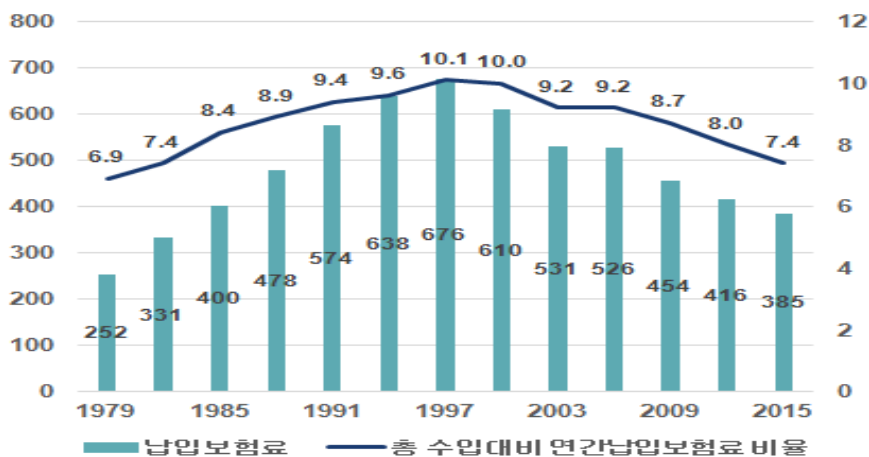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가구의 보험료 납입 금액(〈그림 II-19〉 참조)은 1997년 676,000엔으로 가구소득 대비 10.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385,000엔으로 가구소득 대비 7.4%이다.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과 가입 건수 추이에 비해 가입 금액과 연간 납입보험료 비율 추이가 더 급격히 하락한 것은 의료보험이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되었지만 과거의 양로보험이나 종신보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따라서 납입 보험료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I-19〉 일본 가구의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 금액

(단위: 천 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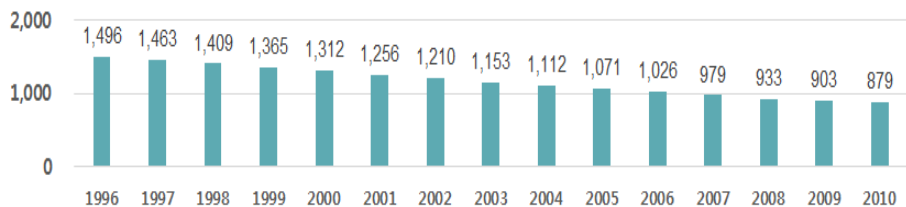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개인보험 보유계약 금액(〈그림 II-20〉 참조)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II-20〉 일본 생명보험회사 개인보험 보유계약 금액

(단위: 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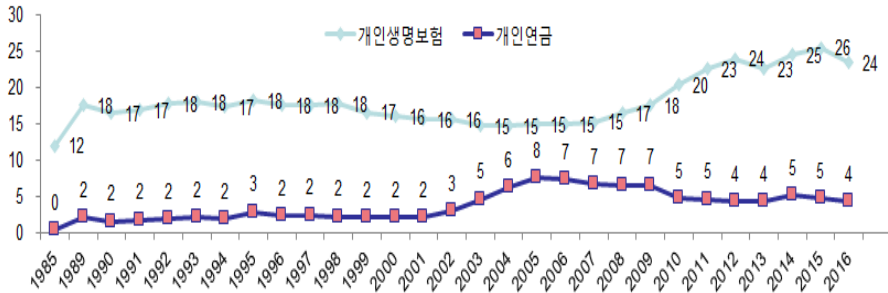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다만 수입보험료(〈그림 II-21〉 참조)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던 추세가 2000년대 초반 변액연금과 2008년 일본 우체국보험의 민영화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I-21〉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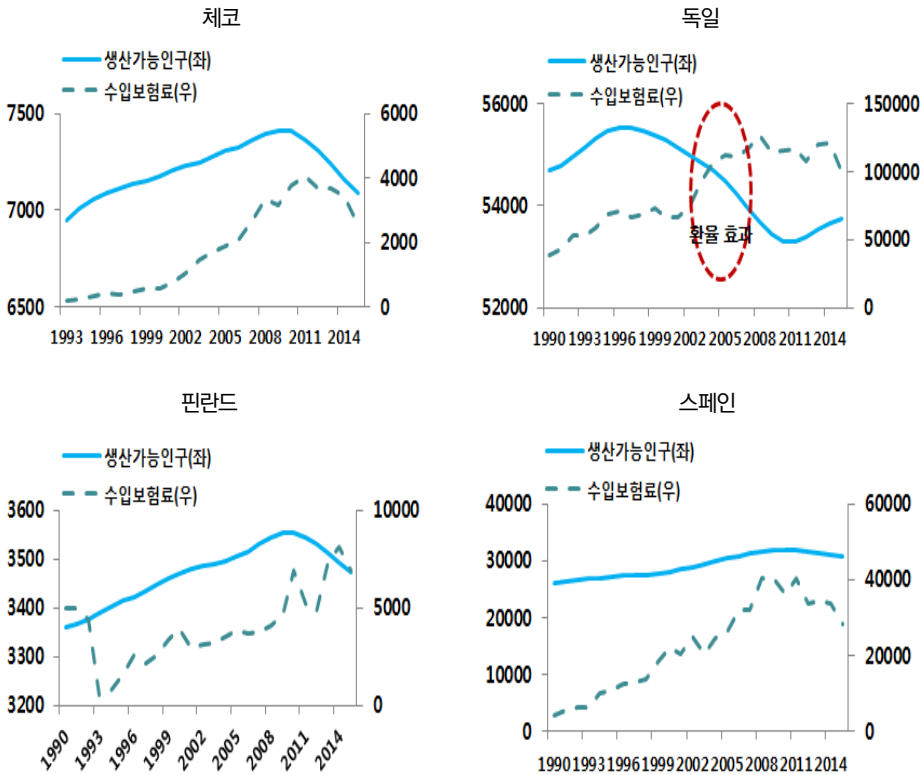
(단위: 조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그림 II-22〉 생산가능인구와 수입보험료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자료: OECD, <http://data.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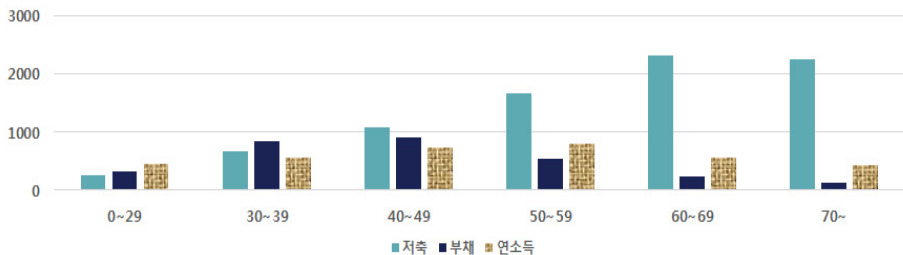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보험수요가 위축된 것이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다른 국가를 보더라도 생산가능인구와 수입보험료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II-22〉 참조). 독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수입보험료가 달러화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유로화 출범으로 독일 마르크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상되었는데, 이러한 환율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나. 보험수요 차별화

경기가 부진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도 달라졌다. 인구 고령화로 자산이 많은 노인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었다. 일본은 60대와 70대의 가구주의 경우 40대 가구주에 비해 저축은 2배 정도 많고 부채는 절반 수준이다(〈그림 II-23〉 참조).

〈그림 II-23〉 일본 가구주 연령별 가구 재무 상황

(단위: 만 엔)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2009년 현재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은 1,500조 엔에 달하는데(Kuga 2013) 이 중 60세 이상이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표 II-13〉 참조).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 중 60세 이상이 소유한 금융자산은 1999년 48.8%, 2004년 55.9%, 2009년 6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하 모든 연령이 보유한 금융자산 비중은 낮아졌다.

〈표 II-13〉 일본 가구주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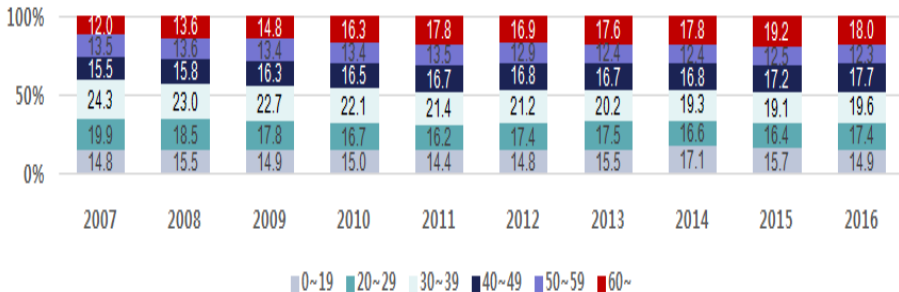
구분	1999	2004	2009
30세 미만	1.7	1.1	0.9
30~39대	8.2	6.6	6.3
40~49세	16.9	12.8	11.9
50~59세	25.2	23.6	20.0
60~69대	29.0	31.0	33.2
70세 이상	18.9	24.9	27.8
60세 이상	48.8	55.9	61.0

자료: Kuga(2013)

이러한 자산 여력으로 인해 노인층의 신계약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60세 이상의 신계약 비중은 2007년 12.0%에서 2016년 18.0% 상승하였다(〈그림 II-24〉 참조).

〈그림 II-24〉 연령별 신계약 구성비(건수)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특히 이들은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에 관심이 많아 일시납 연금과 종신보험 그리고 의료보험 및 양로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다(〈표 II-14〉 참조).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신보험 수요가 높아지며 정기보험 수요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양로보험도 60세 이상에서 수요가 높다. 노인층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수명이 연장되었고, 상속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14〉 일본 연령별 보험 수요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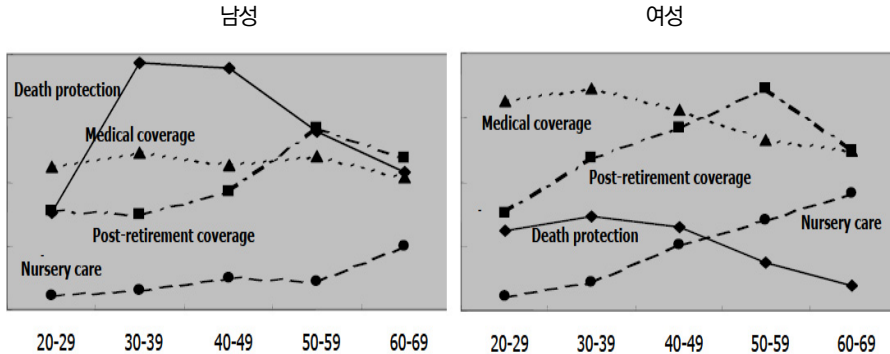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종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	기타
20세 미만	8.6	11.4	8.1	71.9
20대	21.6	22.1	9.4	46.9
30대	24.1	21.2	7.9	46.8
40대	25.5	18.0	9.3	47.3
50대	33.7	11.9	7.8	46.7
60세 이상	44.9	4.1	11.0	40.8

자료: Okayasu(2016)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비혼 또는 만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망급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생존급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을 바라보는 시각도 성별로 크게 변화하였다(〈그림 II-25〉 참조).

〈그림 II-25〉 일본 성별·연령별 보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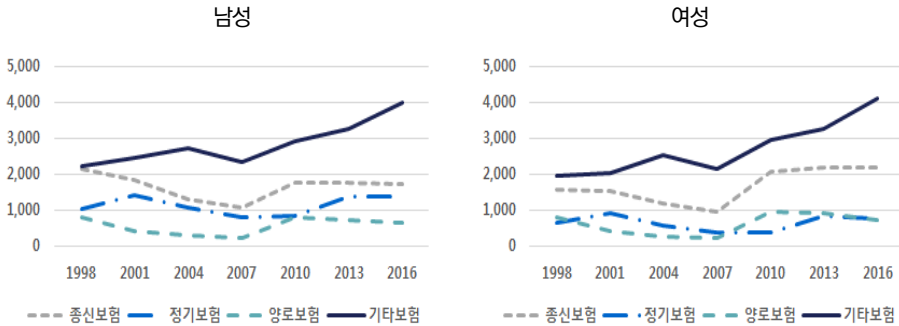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남성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30~40대 남성은 가족을 위한 사망 보험에 관심이 높다. 남성의 연금에 대한 수요는 40대에 들어서야 증가한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림 II-26〉 일본 성별 보험 수요

(단위: 천 건)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남성은 정기보험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종신보험 비중이 높고(〈그림 II-26〉 참조)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도 젊을 때부터 크며, 특히 요양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험 계약 건수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표 II-15〉 참조).

〈표 II-15〉 일본 성별 보험 수요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4년)

(단위: %)

구분	종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	기타
남성	23.3	18.7	8.4	49.6
여성	29.0	11.1	9.5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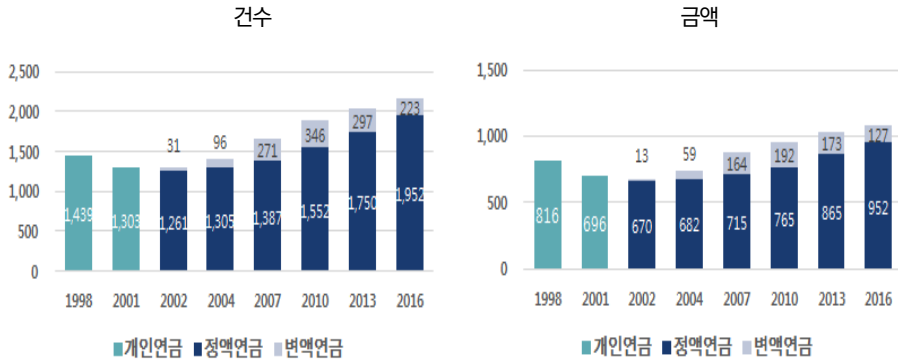
자료: Okayasu(2016)

다. 공적보장 축소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 수요 확대

인구 고령화, 가구구조 변화 이외에도 공적보장 축소로 개인연금과 암보험, 의료보험 등 제3분야 상품 수요가 확대되었다(〈그림 II-27〉, 〈그림 II-28〉 참조).

〈그림 II-27〉 개인연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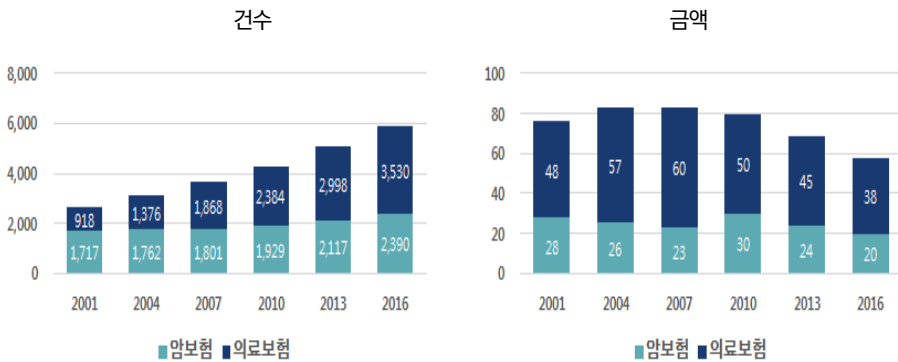
(단위: 만 건, 천억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그림 II-28〉 암보험 및 의료보험 추이

(단위: 만 건, 천억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2000년대 들어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먹거리는 암보험과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시장이 크게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였다.

Ⅲ.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일본 보험산업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일본 보험산업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가 3,8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5,330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표 Ⅲ-1) 참조).

〈표 Ⅲ-1〉 주요국 생명보험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태리	독일	한국	전체
553	383	219	157	153	118	114	91	2,546

자료: Nishimura(2016)

일본 생명보험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 수는 42개(2014년)에 불과하다. 미국 761개(2013년), 영국 387개(2014년), 프랑스 234개(2010년)에 비해 매우 적다(표 Ⅲ-2) 참조).

〈표 Ⅲ-2〉 주요국 생명보험회사 수

(단위: 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2	761	387	234

주: 일본은 2014년, 미국은 2013년, 영국은 2014년, 프랑스는 2010년 기준임
자료: Nishimura(2016)

〈표 Ⅲ-3〉 일본 생명보험시장 점유율

(단위: %)

4개 대형사	외국계	중·소형사	손해보험 자회사
46	27	18	9

자료: Nishimura(2016)

시장 점유율(보유계약의 연납화⁵⁷⁾ 순보험료 기준)을 보면 4개 대형사가 46%, 외국계가 27%를 차지하고 있다(표 III-3) 참조).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상품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르다. 상대적으로 대형사는 종신보험에, 중형보험사는 정기, 양로, 의료보험에, 그리고 외국계는 종신, 정기 및 의료보험에 집중하고 있다(표 III-4) 참조).

〈표 III-4〉 일본 보험회사별 상품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1년)

(단위: %)

구분	종신	정기	양로	의료	개호	기타
日本	67.3	3.1	10.1	11.7	-	7.8
第一	60.0	3.9	8.6	19.7	-	7.8
明治安田	72.0	16.7	1.3	5.3	-	3.6
住友	74.5	0.9	1.9	16.9	-	5.8
三井	79.8	1.8	3.0	11.1	-	4.3
朝日	27.5	20.1	0.4	45.9	4.0	2.1
大同	4.7	75.3	5.1	15.0	-	-
太陽	0.6	4.0	13.4	25.2	14.4	42.5
富國	2.4	0.6	1.9	57.8	22.2	15.0
Sony	22.6	13.2	6.5	27.6	6.0	24.2
Prudential	29.5	20.4	0.4	16.4	0.6	33.3
Metlife	24.5	6.5	0.9	67.4	-	0.7
AFLAC	10.7	1.9	0.1	77.6	-	9.6

자료: 金稼(2013)

일본 보험산업은 1980년대 말까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수명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사차익 확보, 자산버블 붕괴 이전의 높은 투자수익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본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이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다. II장 7절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보험수요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57) 월납보험료나 일시납보험료 등 모든 수입보험료를 연납화시킨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10년 만기 즉시연금 보험료가 1억 원일 때 연납보험료는 1억 원을 10으로 나눈 천만 원이 됨

둘째, 버블경제 붕괴이다. 경기 침체는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제한하였다. 저금리로 인해 저축성 보험 수요 및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이차역마진으로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실물경기 및 자산시장이 장기간 부진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됨에 따라 조세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여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넷째, 금융규제 환경 변화이다.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 및 제3보험진출 허용, 방카 등 다양한 판매채널 도입, 외국계 보험회사 진입 등이 겹치면서 상품 및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보험회사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주식회사 전환 등 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정부 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악화로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여 왔다. 공적 부문의 제도 변화는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복지 부문을 보장하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섯째, 보험수요 변화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암 등이 조기에 발견되며,⁵⁸⁾ 진보된 의료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연금 및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세대는 노후소득을 위해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나 기존의 투자보다는 덜 위험한 투자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인구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도 정기사망보험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종신보험과 연금 및 요양보험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해 본인을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요양보험 수요가 높아졌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일본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58)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7)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망 원인은 암(28.7%), 심장질환(15.2%), 폐렴(9.4%), 뇌혈관질환(8.7%) 순임

1. 보험수요 변화 대응

가. 보험상품⁵⁹⁾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보험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실질적인 상품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다. 보험료와 상품이 감독당국에 의해서 엄격히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사들은 주력 상품과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만 구사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는 개인보험시장에서 양로보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소비자 요구가 점진적으로 생존보장에서 사망보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후 고도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생활수준 향상, 인구의 도시 유입, 핵가족화 등을 배경으로 가족을 위한 가장의 사망보장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초기에는 양로보험 100만 엔+정기특약 100만 엔 수준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정기특약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로특약부 정기보험이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망보장이 확대되었다. 특히 소비자들을 방문하여 사망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영업직원 채널도 사망보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증가하는 교육비로 인해 어린이상품도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졌었다.

일본 경제가 1974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보장금액이 미래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높은 보장금액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보험금중도증액제도 및 계약전환제도가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는 높은 사망보장 상품이 생명보험의 주된 트렌드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⁶⁰⁾ 사망보장에 보험수요가 집중된 것이었다. 또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재무적 안전을 위한 사망보장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정기특약에 더해서 다양한

59) Swiss Re(2013), Yoneyama(2017), Okayasu(2016), 생명보험협회(2012), 한낙현·김도훈·이규훈(2006), Jiang(201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60) 국민연금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월 수령액이 연속적으로 증가하였음. 1964년 10,000엔이었던 것이 1969년 20,000엔, 1973년 50,000엔으로 증가하였음. 1973년에는 국민연금이 물가연동제로 변경되었음. 이러한 연금액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음

종신보험 상품과 정기상품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보통 양로보험보다 정기부양로보험의 비중이 더 커졌고, 정기부양로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만기보험금보다 몇 배 커지는 고배율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 당시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질병관련 특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정기부종신보험이 주요 상품으로 부상하였다. 정기부종신보험은 특약부분은 같지만 주보험을 양로보험에서 종신보험으로 바꾼 것이었다.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되던 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종신보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본인 사망 시 가족의 생활을 걱정하는 가구주의 경우 정기부 양로보험에 비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은퇴 이후에도 보험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금리 자유화와 같은 금융시장 규제 완화는 생명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금융업계는 금융규제 완화와 선진금융공학 도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다른 금융업권과의 경쟁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회사들은 일시납 단기양로보험과 변액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양로보험의 예정이율이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게 설정되었다. 이 상품은 1970년대 후반에 소개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자산가격 급등과 생명보험상품의 높은 예정이율에 힘입어 투자목적의 일시납 양로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정액개인연금이 인기를 모아 제1차 개인연금 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증감되는 변액보험도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⁶¹⁾ 생명보험회사는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예정이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식배당금으로 이를 감당하였으며 자산가격 상승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1980년대에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었다. 1984년 근로자 의료비용의 자기부담이 기존의 고정금액방식에서 고정비율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적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 의료보험시장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고령층 증가와 수명 연장에 따라 개호보험상품

61) 변액보험은 197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86년 10월에 판매되었음

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의 높은 수요도 유지되었다. 경제가 저성장기로 전환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필요성,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1995년 이후 수요가 위축되었는데, 특히 저금리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과 생명보험회사 파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먼저 주식시장 침체로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예정이율을 낮추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기특약을 가진 종신보험 또는 단순한 정기보험은 수요가 유지되었다. 대신 위험보장과 저축을 합친 양로보험은 부진하였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개인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료보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망담보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의료보장 상품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갔다. 보험회사들은 고령화 진전 및 버블 붕괴에 따라 보장내용을 재검토하였고 소비자 수요가 사망보장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보장 수요로 옮겨감에 따라 상품전략을 의료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대형 생보사는 사망보장 상품에 특정질병특약, 여명급부특약, 다양한 입원특약 등 다양한 의료/개호특약 등을 부가함으로써 상품소구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1996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회사별로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자회사를 통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되면서 통합상품 등 상품개발 경쟁이 촉진되었다.

2001년 7월부터 외자계를 위한 제3분야 상품 규제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제3분야 진입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일본생명보험시장에서 의료보험과 암보험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제1분야와 제3분야 상품을 함께 묶은 패키지형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상품에서 모든 보장을 제공하는 All in One, One Stop형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⁶²⁾ 이것은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

62) 국내에서는 통합형 보험상품으로 소개되었음

여 종합설계보험으로 제공되었으며 사망보장(주보험)에 질병/상해보장(특약)을 더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국민소득 및 가구소득 정체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소비자는 보험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할인된 종합상품이 인기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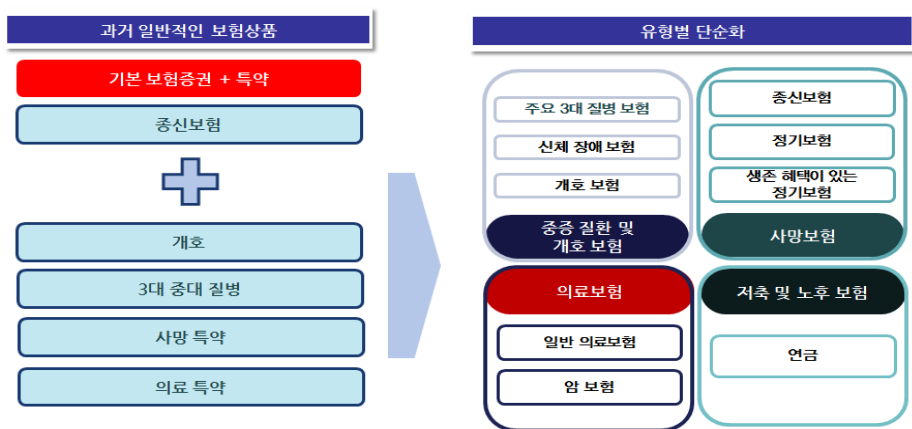
이에 반하여, 외자계 생명보험회사는 대부분 가격이 낮은 제3분야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였다(Urushibata 2003). 이들은 사망보장을 없애는 등 상품 기능을 한정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단순하게 상품을 설계하는 대신 기능을 특화하여 상품 소구력을 높였다. 주력 상품은 대부분 의료보험으로 보험급부는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퇴원 후 통원급부금 정도에 한정되었다. 외자계의 경우 일본시장 진출 시 일본에 없는 상품 공급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니즈가 다양화된 시기에 이들의 주력 상품은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한편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예정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높아진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무해약환급형 또는 저해약환급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⁶³⁾ 보험업계에서 주력으로 판매되는 의료보험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을 없애거나 낮춤으로써 가격을 낮춘 상품들이다. 의료보험은 대부분 무해약환급형 상품이며, 종신보험도 저해약환급금형(일반상품의 70% 수준) 상품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건강 정도에 따라 우량체 할인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새로운 고객층으로 발굴하고자 무심사 보험, 유병자보험 등이 개발되었다. 무심사 보험은 가입 시 언더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액도 300만 엔 등 소액으로 한정하여 장례식 비용 등에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63) 동 상품은 상품판매 후의 해약을 동향이 상품의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계산기초율인 3이월에 예정해약률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예측한 만큼 해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해약률은 사망률 등과 비교하여 통계적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생보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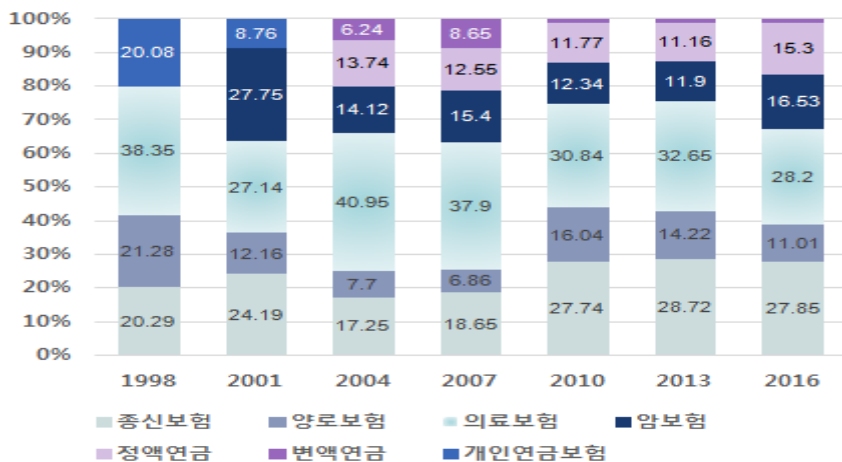
〈그림 III-1〉 일본 생명보험상품 유형화·단순화



자료: Okayasu(2016)

최근 들어 주계약에 많은 특약을 더하는 상품 전략에서 상품을 기능(사망, 질병/요양, 의료/암, 연금/저축 등)별로 유형화하여 단순화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이를 조합하는 상품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2〉 생명보험상품 비중(건수 기준) 변화 추이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한 결과 상품 비중은 <그림 III-2>와 같이 변화하였다. 건수 기준으로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의료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연금의 비중이 높아졌다.

나. 소비자 수요에 따른 채널 전략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판매채널은 다음과 같다(보험연구소 2008). 먼저 설계사이다. 부녀 중심의 판매조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미망인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주력 채널이 되었다. 다음으로 대리점이 있다. 대리점은 모집대리점, 집금대리점, 소개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모집대리점은 보험 계약의 모집과 수급을 모두 담당하는 대리점이고 소개대리점은 신계약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리점이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영업직원, 전화, 인터넷, DM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채널, 신용카드 등 타업종과 제휴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채널,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을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 상담 및 계약을 하는 내점형 점포 등이 있다.

<표 III-5> 판매채널 비중 변화

(단위: %)

연도	설계사 (영업사원)	Direct Marketing	내점형 점포	방카	대리점
2010	77.6	3.3	1.6	1.3	8.8
2003	71.8	5.7	2.7	1.6	6.7
2006	66.3	9.1	2.1	3.3	7.0
2009	68.1	8.7	1.9	2.6	6.4

자료: Ishii(2010)

일본 판매채널은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설계사가 주력 채널이었다. 그러나 저성장 장기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명보험시장 위축, 소비자 수요 차별화,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 다변화 등으로 설계사 채널은 축소되었고, 대리점 채널이 확대되었다(Ishii 2010; Jiang 2013; 金谿 2013). 설계사 채널 비중은 1990년대 말 88%에 달하였

으나 2000년대 중반 70% 이하로 감소하였다(〈표 III-5〉 참조).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일본 보험회사들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게 설계사, 대리점, 내점형 점포, 콜센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채널전략을 추진해 왔다(〈표 III-6〉 참조). 상품 내용 및 가격 비교를 선호하고, 단순한 상품 또는 단순한 계약절차를 원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유형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내점형 점포, 온라인, DM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가 부가가치 높은 컨설팅을 선호할 경우 설계사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대리점 등을 활용하고 있다(Suzuki 2011; 金璫 2013; Nishimura 2016).

〈표 III-6〉 보험회사별 판매채널 전략

소비자 특성	높은 부가가치 서비스 선호			가격비교, 정보검색, 단순한 상품, 간편한 절차 선호		
판매 채널	설계사	대리점	방카 (저축성)	방카 (보장성)	내점형 점포	우편 인터넷
상품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종합적			상대적으로 단순		
생보사	대형사	손보 자회사 외국계	방카 전문사 대형사	외국계 손보 자회사	외국계 손보 자회사 대형사	인터넷 전문사 외국계
성숙도	성숙	상대적 성숙		상대적 미성숙		
규모	대형	중형		소형		

자료: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2014); Nishimura(2016)

먼저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라이프 플래너(Life Planner)를 통한 컨설팅 판매, 통신 판매, 대리점 판매 등에서 채널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면(보험연구소 2008), 지브랄타생명은 여성 설계사를 대량 축소하고 남성 설계사를 확대하였고, 은행, 증권 등 타 업계 영업경험자를 채용하였다. AFLAC은 법인대리점을 주요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암보험 판매를 확대하였고, 소비자 니즈에 따라 부유층 및 중소기업으로 대상으로 라이프 플래너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통신판매채널을 활용하였다. 인터넷 채널의 경우 2008년 4월 최초의 전용 생명보험회사인 SBI AXA가 설립되었다. 특히 2001년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이후 개인연금 및 변액연금 판매를 중심으로

외국계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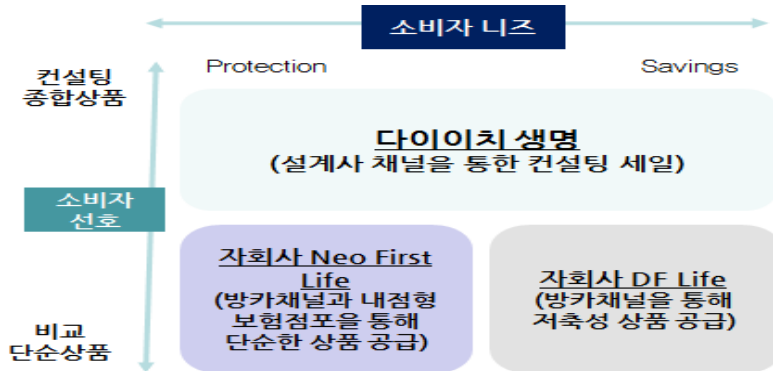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시장 축소로 설계사 채널의 고비용·저효율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외국계의 영향을 받아 설계사 채널의 고능률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재무설계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암보험과 의료보험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국계와 제휴도 강화하였다. AFLAC과 제휴를 맺은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형사의 경우 설계사 채널과의 충돌로 인해 2000년대 초기까지 채널 다각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보험연구소 2008).

〈표 III-7〉 T&D Holdings의 판매채널 전략

계열사	소비자	상품	판매채널
대동생명	중소기업	정기보험	대리점
태양생명	일반 가구	보장성 보험	설계사
T&D Financial	부유층	변액연금	방카

자료: 보험연구소(2008)

〈그림 III-3〉 다이이치 생명의 판매채널 전략



자료: Nishimura(2016)

그러나 T&D Holdings가 상품별로 자회사를 운영하여 성공하였고(〈표 III-7〉 참조), 이에 따라 다이이치 생명도 상품과 소비자 니즈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였다(〈그림 III-3〉 참조). 외국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Prudential Holdings of Japan의 경우 Prudential

생명, Gibraltar 생명, 그리고 Prudential Gibraltar 금융생명 등 3개 생보사를 별도의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 선호에 대응하여 보험상품 구매 결정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면채널인 내점형 점포가 탄생하였다. 2000년 Life Plaza Holdings 대리점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이후 일본생명, AFLAC 등이 직영 내점형 점포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내점형 점포와 유사한 복합점포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 내점형 점포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점형 점포가 성장한 배경에는 우선 보험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보험소비자들은 설계사들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구매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의 상품광고와 이 상품들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소비자는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보험상품에 관한 과도한 정보는 소비자들을 피로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내점형 점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행동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우선 소비자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방문하였을 때 소비자의 요구를 성실히 청취한 후 그들에게 적절한 상품을 제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지어 보험에 대한 니즈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고객의 의향을 청취한 후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고객이 다양화되었고 채널도 다양화된 것이 내점형 점포의 성장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 고객에 대해서 여러 채널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통신판매나 광고의 영향으로 보험가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고객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설계사 방문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직장 방문 제한 등 보험판매 환경 변화가 현재의 내점형 점포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이윤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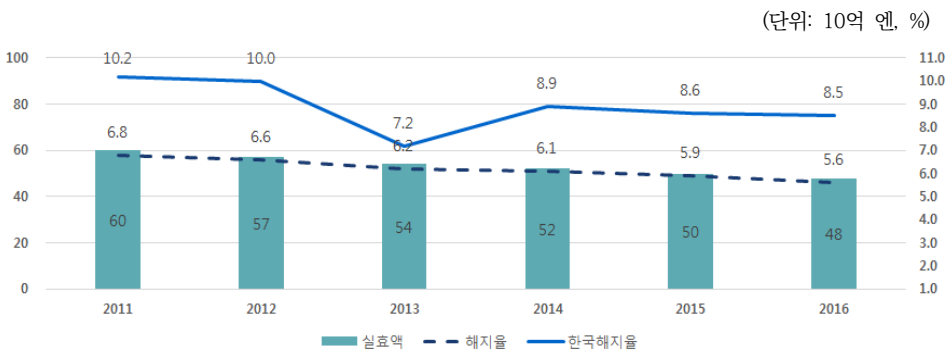
내점형 점포의 주요 고객은 30대 주부로 나타났으며 보험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점형 점포가 빠르게 성장하자 대형 보험회사들도 내점형 점포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생명이 Nissay Life Plaza, 다이이치 생명은 Dai-ichi life shop을 설치하였다. 그 이외에도 스미토모 생명, 메이지야스다 생명, AFLAC 등도 내점형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다. 계약유지 노력 강화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계약자 유지가 중요해졌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각각 소위 고객 서비스 개혁 프로젝트(Customer Service Renovation Project)를 수립하여 소비자 만족을 통한 계약유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정기 방문 횟수를 늘리고 영업조직 교육을 강화하며, 판매채널을 소비자 니즈에 맞게 다각화하였다. 그리고 상품 측면에서도 특약을 통폐합하고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였고 계약 제안에서 체결까지의 업무도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13개월차 유지율이 93%를 상회하게 되었고 해지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그림 III-4> 참조).

〈그림 III-4〉 해지율 추이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2. 경영 효율화

이차역마진과 시장 축소 등에 대해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첫째, 예정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었고 보험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투자전략을 전환하였다. 둘째, 보장성 보험 비중을 늘려서 사망위험률을 통한 이익을 안정적으로 발생시켰다.⁶⁴⁾ 셋째, 자본을 확충하였다. 넷째,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로 영업비용과 인건비를 줄였다. 다섯째, 해외진출을 확대하였다.

가. 자산운용 전략 변화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은 버블경제 붕괴 및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1980년 26조 2,580억 엔이었던 자산은 2014년 3월 말 현재 350조 5,830억 엔으로 늘어났다. 버블 붕괴의 영향이 본격적이었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자산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6년 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가 43.0%, 대출 8.3%, 주식 5.7%, 해외투자 22.7%, 회사채 6.9%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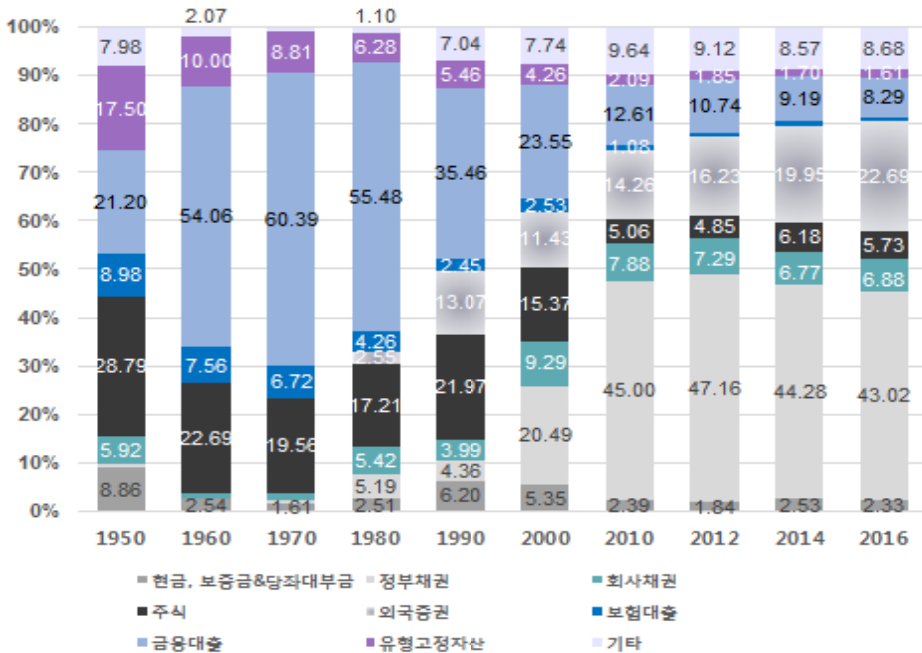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운용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그림 III-5〉 참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주로 대출과 주식으로 운용되었다. 1980년 대출비중은 55.5%, 주식비중은 17.2%에 달하였다. 자산가격 거품이 정점에 달하였던 1990년을 보면 대출이 35.5%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주식비중이 22%로 크게 늘어났다. 해외주식투자도 엔화 강세에 힘입어 13.1%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자산운용 전략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산가격 폭락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하였고 저금리로 인해 이차역마진이 발생함에 따라 대출과 주식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채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출 비중은 1990년 35.5%에서 2000년 23.6%, 2010년 12.6%로 낮아졌다. 주식 비중은 1990년 22.0%에서 2000년 15.4%, 2010년 5.1%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국채는 1990년 4.4%에서 2000년 20.5%, 2010

64)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음

년 45.0%로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1990년 13.1%에 달하였던 해외주식투자 비중은 2000년 11.4%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14.3%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Ⅲ-5〉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2010년 이후에도 자산운용을 보면 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해외주식 및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일본의 국내외 금융시장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Ⅲ-8〉 참조). 특히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엔화 약세에 따라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I-8〉 자산운용 수익률

(단위: %)

연도	채권	국내주식	해외투자	대출	부동산	일반계정
2009	1.64	2.33	2.52	2.05	2.87	1.86
2010	1.86	1.25	2.06	1.98	2.52	1.79
2011	1.91	1.56	2.91	1.94	2.27	1.92
2012	2.00	0.61	5.25	2.18	2.35	2.36
2013	1.95	5.14	4.60	2.15	2.43	2.40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자산 듀레이션도 길어졌다(〈표 III-9〉 참조). 2016년 현재 자산 듀레이션은 12.3년으로 부채 듀레이션 14년과 격차가 거의 없다. 보유 국채 중 10년 미만 국채 비중이 2000년 88.3%였으나 2013년 29.1%로 줄어들었고, 10년 이상 국채 비중은 같은 기간 11.7%에서 70.9%로 늘어났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5).

〈표 III-9〉 자산 부채 듀레이션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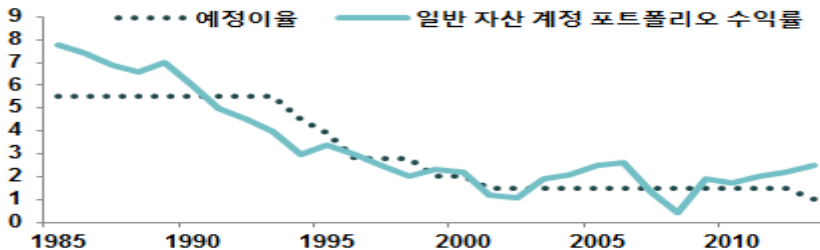
구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자산	12.3	10.0	12.0	10.5
부채	14.0	20.2	11.5	11.3

주: 일본 2016년, 독일과 영국 2013년, 미국 2015년

자료: Washimi et al.(2017)

〈그림 III-6〉 이차역마진

(단위: %)



주: 대형 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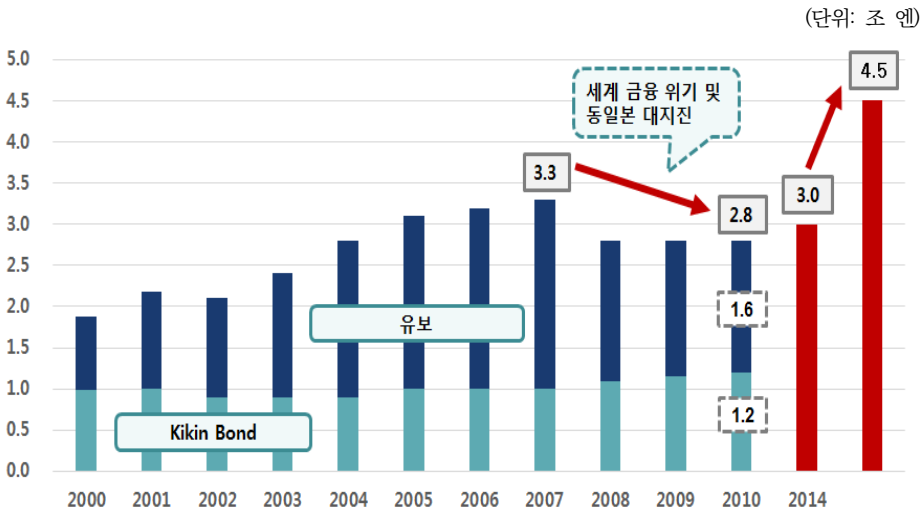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이처럼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1990년대 들어 ALM을 중시하는 가운데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와 계약 전환, 그리고 자산운영 전략 변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들어 이차역마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III-6) 참조).

나. 자본 확충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차역마진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유보를 확대하였다. 2002년 법이 개정되어 상호회사의 경우 최소배당비율이 이익의 80%에서 이익의 20%로 낮아졌다. 내부유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후순위채(Kikin Bond) 발행이 허용되어 이차역마진에 대응한 준비금을 후순위채 발행으로 추가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그림 III-7), <표 III-10> 참조).

〈그림 III-7〉 자본 확충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표 III-10〉 회사별 자본 확충 규모

(단위: 억 엔)

구분	2006	2007	2008	2009
T&D Financial Life	320	-	-	1,200
ING Life	100	-	150	68
Tokio M. & Nichido Financial Life	250	50	-	-
Sumitomo Life	500	-	-	1,000
MassMutual Life	100	-	130	-
Tokio M. & Nichido Life	500	-	-	-
Sompo Japan Nimawari Life	-	200	-	-
Mitsui Sumitomo MeLife	-	51	204	-
Aioi Life	-	100	-	-
Mitsui Life	-	-	600	-
The Dai-ichi Frontier Life	-	-	-	100
Alianz Life	-	-	-	26
Fukokushinrai Life	400	-	-	-

자료: Noguchi(2010)

이 가운데 주식회사 전환이 활발해졌다(〈표 III-11〉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험 회사 부실로 계정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가 상호회사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상호회사 체계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들어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주류가 되고 있다. 일본 보험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 및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보다 사업 전환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Ikemoto and Saita 2009). 주식회사는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 재구성과 인수 합병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상호회사로는 최근의 보험산업 환경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⁶⁵⁾ 또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의 경우 상호회사는 이해상충 문제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경우 만기가 가까운 계약자의 이해와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5) 미국에서도 상호회사였던 Equitable과 Metropolitan이 각각 1992년 AXA와 2000년 Metlife에 인수되었으며, Prudential과 Principal이 2001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음

〈표 III-11〉 일본 탈상호회사 추이

연도	상호회사	주식회사
1996	Toho Life	파산, AIG Edison Life에 인수
1997	Nissan Life	파산, Aoba Life에 인수
2000	Dai-hyaku Life	파산, Manulife에 인수
2000	Chiyoda Life	파산, AIG Star Life에 인수
2001	Tokyo Life	파산, Yamato Life에 인수
2002	Daido Life	2004년 Taiyo Life와 지주회사 설립
2002	Tamato Life	-
2003	Taiyo Life	2004년 Daido Life와 지주회사 설립
2004	Mitsui Life	-
2010	Dai-ichi Life	-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일본 경제는 버블경제 붕괴 이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보험료에 충분한 리스크 마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어 자본이 줄어든 반면 규제 완화에 따라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했다. 상호회사로도 자본을 확충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주식회사에 비해 수단 등이 제한되어 있었다(Ikemoto and Saita 2009).

상호회사의 의미도 퇴색하였다. 상호회사의 철학은 높은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사실상 낮은 보험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규제 완화로 상호회사의 경우에도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여 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배당이라는 상호회사의 장점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지고 배당도 줄어들었다. 또한 상호회사는 계약자들에 의해 직접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계약자 전체가 아닌 계약자 대표들에 의해 간접경영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식회사와 경영이 유사해졌다.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조는 많은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소유와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높은 보험료와 높은 배당 경영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도 탈상호회사에 동의하게 되었다(Ikemoto and Saita 2009).

〈표 III-12〉 일본 주식회사 비중

(단위: 개, %)

구분	1997		2009	
	회사 수	자산비중	회사 수	자산비중
상호회사	16	91.7	5	50.4
주식회사	28	8.3	40	49.6
합계	44	100.0	45	100.0

주: 2009년 통계에는 일본 우체국보험(Kampo)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Ikemoto and Saita(2009)

일본 생명보험산업에서 상호회사의 자산 비중은 1997년 91.7%에서 2009년 50.4%로 감소하였다(〈표 III-12〉 참조). 이는 대형사가 상호회사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2010년 다이이치 생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주식회사의 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늘어났다.

다. 보험산업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일본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버블경제 붕괴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보험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졌었다. 수익성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는데,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모습이 가려졌었다. 버블경제가 붕괴되자 일본 보험산업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둘째, 버블경제 붕괴에 따라 은행 시스템이 부실해지고 1997년부터 파산한 은행이 나타났는데, 생명보험회사 역시 7개가 2001년까지 파산함에 따라(〈표 III-13〉 참조) 인수합병이 새로운 경영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1996년 금융빅뱅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방식으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되었고, 제3분야에 대한 규제가 2001년 철폐되었으며,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판매채널이 도입된 것도 인수합병 흐름에 도움이 되었다.

〈표 III-13〉 일본 생명보험산업 파산

구분	Nissan	Toho	Daijyuku	Taisho
자산(억 엔)	18,227	21,900	13,000	1,545
부채(억 엔)	21,256	28,400	16,176	1,910
인수회사	Aoba (Prudential)	GE Edison (Gibraltat)	Manulife	Azami (PGF)
공적자금(억 엔)	2,000	3,663	1,450	267
준비금 감액(%)	-	10	10	10
예정이율 조정(%)	2.75	1.5	1.0	1.0
회생방식 (년도)	계약이전 (1997)	계약이전 (2000)	계약이전 (2001)	계약이전 (2001)
구분	Chiyoda	Kyoei	Tokyo	Yamato
자산(억 엔)	23,330	37,250	6,900	1,949
부채(억 엔)	28,280	44,145	7,632	2,592
인수회사	All Star (Gibraltar)	Gibraltar	T&D Financial	Prudential (PGF)
공적자금(억 엔)	0	0	0	278
준비금 감액(%)	10	8	-	10
예정이율 조정(%)	1.5	1.75	2.6	1.0
회생방식 (년도)	주식회사 전환 (2001)	사업재개 (2001)	주식회사 전환 (2001)	사업재개 (2009)

자료: 武田久義(2008);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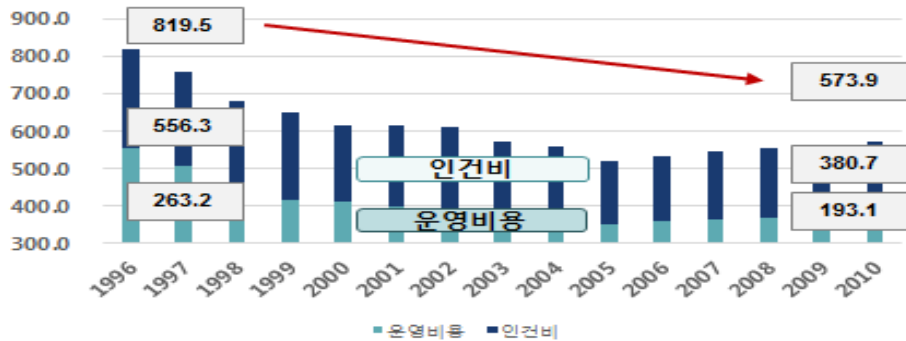
셋째, 해외 환경 변화이다.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일본 보험산업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ROE나 ROA 등 효율성 지표를 볼 때, 수익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 보험산업은 금융상품 개발 및 One Stop Service 등 판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어 갔다.⁶⁶⁾ 일본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인수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Citicorp와 Travelers Group 간의 합병이 일본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Citi은행의 경우 일본에서 이미 20개 지점을 운영중이었는데, 24시간 ATM 이용, 다양한 통화 은행계좌, 지점과 우체국은행과의 연계 등 파격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경쟁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도 인수 합병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66) 미국의 경우 Merrill Lynch & Co의 Mercury Asset Mangement 인수, Morgan Stanley & Co와 Dean Witter, Discover & Co의 합병, Bankers Trust의 Alex, Brown & Sons의 인수 등 1997년에 930억 달러에 달하는 370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음(Sibbit 2014)

인수 합병 이후 그리고 자체적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1996년 5,563억 엔에서 2010년 3,807억 엔으로 줄였으며, 운영비용도 같은 기간 2,632억 엔에서 1,931억 엔으로 감소하였다(〈그림 III-8〉 참조).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는 보험회사 임직원 수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 인력조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용이 절감된 규모를 미루어 짐작컨대, 구조조정 강도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8〉 비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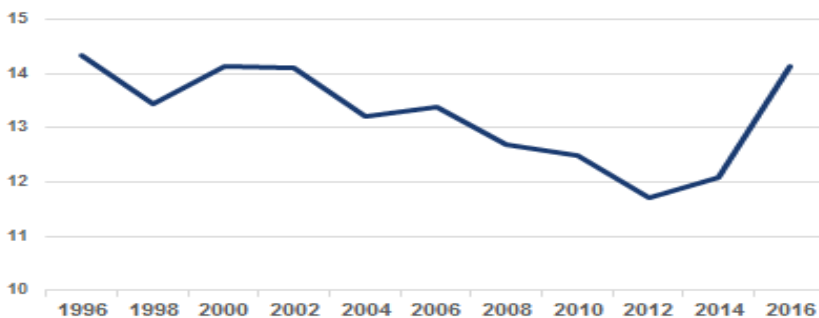
(단위: 십억 엔)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그림 III-9〉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사업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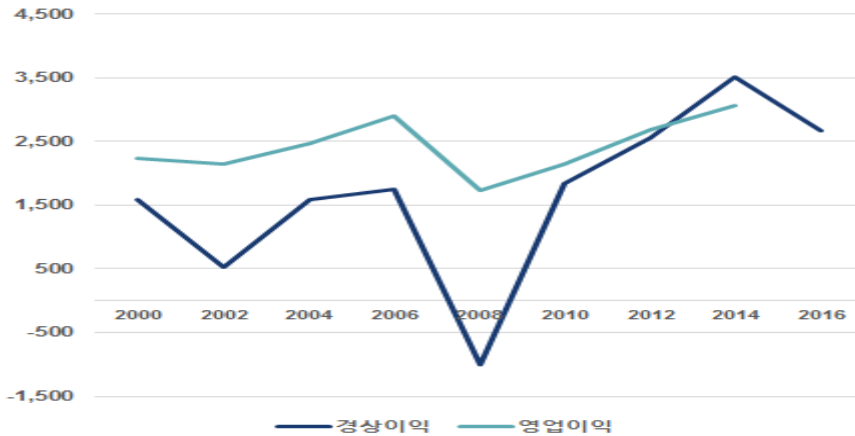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으로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사업비율도 2000년대 들어 낮아졌다(〈그림 III-9〉 참조). 그러나 최근 들어 사업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일

본 생명보험회사들이 다시 외형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M&A 및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III-10〉, 〈표 III-14〉 참조).

〈그림 III-10〉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추이

(단위: 십억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표 III-14〉 주요국 생명보험산업 ROE 추이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2009	2.9	5.3	10.2	9.2	7.3
2010	8.4	11.4	11.4	10.4	6.3
2011	8.6	5.6	7.9	7.5	5.9
2012	9.6	5.7	8.9	8.0	7.3
2013	7.5	7.6	12.3	11.5	12.3
2014	7.6	4.7	10.7	10.4	11.5
2015	7.3	4.8	10.6	10.8	13.4
2016	5.6	5.3	8.5	9.0	9.5

자료: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

라. 업무 제휴 강화

금융규제 완화로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 간 업무 연계 및 제휴가 가능해졌다. 그룹 간 업무 연계 사례를 보면 일본생명의 경우 그룹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사망, 의료, 개호, 노후보장, 손해보험 등 보험 전분야의 고객 니즈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관리하는 니세이 보험구조를 개발하였다(류성경 2007). 각 보험회사가 보유한 강점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 제휴를 보면 다이이치 생명과 AFLAC 간에 업무 제휴를 들 수 있다. 다이이치 생명은 의료보험 등 제3분야 보험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AFLAC의 상품 개발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AFLAC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한계를 보이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이이치 판매채널 이용이 필요하였다. 대동생명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O 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서 납세협회 및 전국법인협회와 제휴를 통해 고객 밀착형 채널을 구축하였다(이태열 외 2016) 최근 들어 일본 우체국보험인 Kampo는 다이이치 홀딩스와 해외진출, 자산관리, 공동연구 등 3개 영역에서 업무 제휴를 맺었고, 베트남에 공동으로 진출하였으며, 다이이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와 주식도 교환을 하였다(Japan post insurance 2017).

이 밖에도 판매채널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업무제휴 사례를 보면(Ishii 2010), 메이지 생명과 Tokyo Marine & Nichido 손보 간의 제휴를 통해 주로 자동차보험이기는 하지만 680억 엔에 달하는 수입보험료 성과를 올렸으며, Sumitomo 생명과 Mitsui Sumitomo 손보 간의 제휴를 통해 381억 엔의 수입보험료가 발생하였다.

마. 해외 진출 확대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아시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시장은 과거 일본과 인구 구조가 유사하며 생산가능인구가 풍부하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으며 높은 성장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연평균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표 III-15) 참조), 2013~2016년 기간 동안 OECD 국가는 평균 1.0%

성장하였으나 아시아는 5.5% 성장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15.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표 III-15〉 연평균 보험료 실질성장률(2013~2016년) 추이

(단위: %)

OECD		아시아		한국		베트남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1.0	1.8	5.5	7.9	0.0	2.2	15.0	7.3

자료: 조용운(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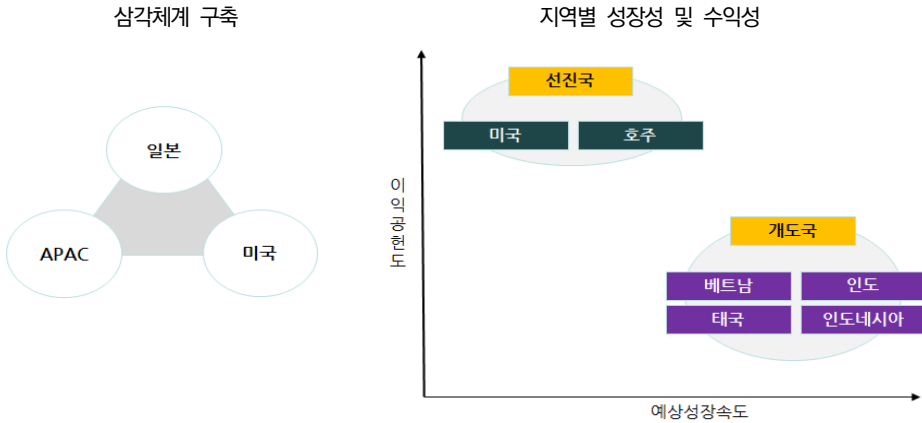
〈그림 III-11〉 일본 생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이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에 진출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례로 다이이치 생명의 해외진출 전략을 보면, 지역별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그림 III-12〉 참조). 구체적으로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이익의 공헌도가 높지만 성장속도는 낮고, 동남아시아는 아직 이익의 공헌도가 낮지만 성장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가져가기 위해 일본, 동남아시아 및 호주 그리고 미국 등 삼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III-12〉 다이나믹 생명의 해외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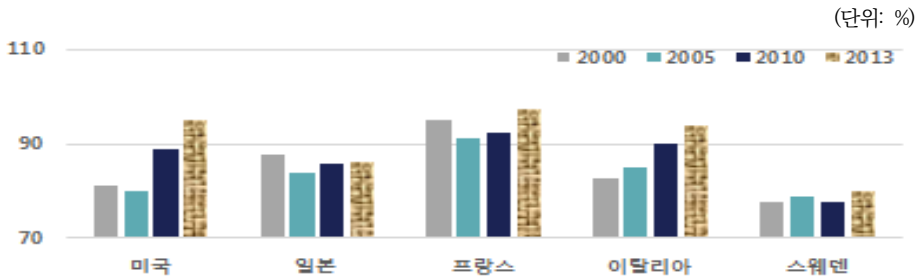


자료: Nishimura(2016)

3. 공적보장 축소 대응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노인 세대는 구매력이 충분하다. 가구주가 60대와 70대의 경우 저축이 40대와 50대에 비해 많으며 부채도 적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은퇴 전 대비 은퇴 후 가처분소득 비율이 높지 않다(〈그림 II-13〉 참조). 더구나 주요국의 경우 동 비율이 2000년대 들어 다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나 일본의 경우 정체되어 있다. 공적보장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I-13〉 은퇴 전 대비 은퇴 후 가처분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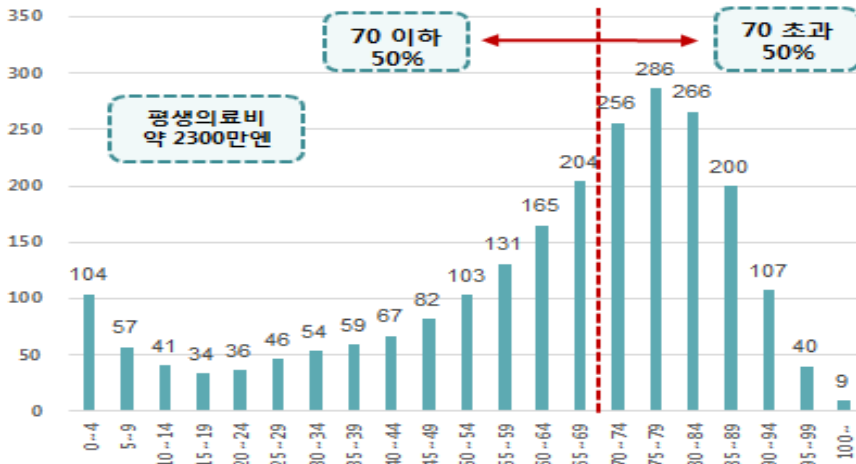


자료: 강태현(2016)

그런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입원을 및 입원 일수가 증가하며 의료비도 70대 이후에서 50%가 발생한다(〈그림 III-14〉 참조). 일본의 경우 실재나이와 건강나이 간의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표 III-16〉 참조).

〈그림 III-14〉 일본 연령별 의료비

(단위: 만 엔)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표 III-16〉 일본 성별 요양이 필요한 기간

(단위: 년)

구분	남성			여성		
	건강	신체적 제한	기대수명	건강	신체적 제한	기대수명
2010년	70.4	9.2	79.6	73.6	12.8	86.4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5)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소비자조사(2016)에 따르면 보험급부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요양(75%), 사망(57%), 의료(51%), 노후소득(7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회사의 기회는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망급부를 담보하는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연금시장, 의료보험시장 등 제3분야 보험시장이었다(Jiang 2016). 일본 보험회사들은 노인층에 대한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실버 서비스 제공과 이들의 금융자산 흡수 등 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류성경 2007).

가. 버블붕괴 이전 대응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1980년 5월 「초고령화 사회 21세기 출발-일본형 성숙사회 수립을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일본 보험산업이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무엇을 준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동 보고서는 경제·사회 성숙화 및 인구구조 고령화 등 일본의 향후 전망 및 영향에 대해 분석·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교훈을 바탕으로 9가지 내용을 제안하였다.⁶⁷⁾ 이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와의 조화를 강화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의 효율화(판매 효율화, 자산운용 효율화) 촉진, 고객 서비스 촉진(계약 유지를 위한 세대별 관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상품 제공 등), 정보 제공 충실과 사회적 책임 수행(상품 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충실, 생명보험문화센터의 조사·홍보활동 추진, 사회적 활동의 활발화) 등이 실행과제로 제시되었다.

둘째, 라이프 사이클 변화와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더욱 잘 짜여진 사망보장 상품 제공이 필요하고, 인구구조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개인연금, 기업연금, 저축성 보험, 의료 보험 등 생존 보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성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가족형 보장 상품, 교육(결혼) 자금 목적의 보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소비자 신용생명보험 시장 확대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은 물론 상품의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서비스 충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상품 다양화·고도화로 고객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라이프 컨설턴트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판매제도의 핵심으로 설계사(외무원) 제도를

67) 또한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는 고령사회에 관한 통계적 기초연구 및 고령사회에의 대응에 관한 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1981년에 「고령화사회 대응」이라는 책을 발행하였음

의 역할 확대,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정보관리체제의 충실과 설계사(외무원) 활용 고도화, 법인시장·단체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운용 다각화에 의한 수익성 증시 자산운용과 장기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유가증권 투자 확대, 해외 투·융자 추진, 부동산 투자 다양화, 주택대출 및 소비자대출 등 개인금융 서비스 확충,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공공채권 투자 적극화, 생명보험 자금의 지방 환원, 중소기업 대출)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자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우대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자산운용과 관련한 대책의 경우 다소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제안들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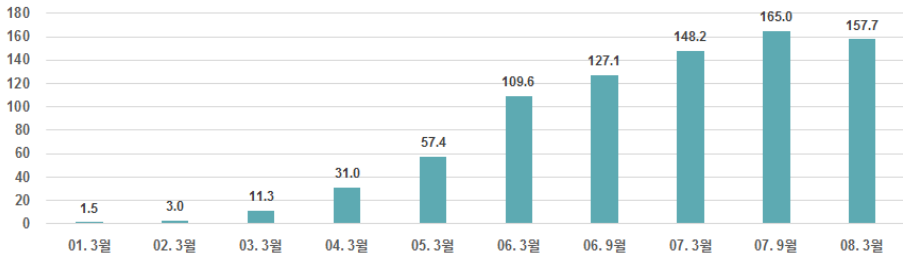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층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Noguchi(2010)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자산이 많은 그룹의 경우 상속을 위한 종신보험 수요가 높았고, 10% 정도에 해당하는 간병이 필요한 그룹의 경우 의료 및 개호보험 수요가 존재했지만,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노인인구의 경우 노후에 대한 준비가 크지 않았다. 공적보장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부의 공적보장 축소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 수요가 늘어났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대응은 개인연금 공급 확대였다. 1980년대 말에서는 파산의 원인이 되었지만 자산가격 급등으로 높은 예정이율의 개인연금이 공급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개인연금이 예정이율 하락과 금융위기로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계 주도로 변액연금이 출시되었고, 낮은 금리로 인해 2000년대 들어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변액연금은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가 허용된 2002년 이후 급증하였다(〈그림 III-15〉 참조). 처음에는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변액연금을 은행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으나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최저보증위험 때문에 판매를 주저하였다.

〈그림 III-15〉 특별계정 자산 잔고

(단위: 천억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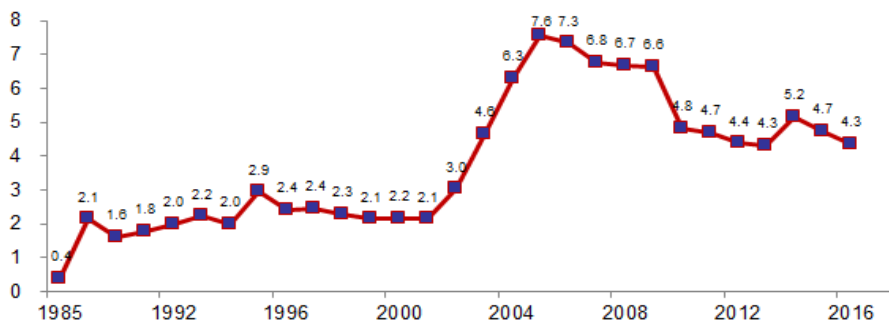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사망보험금만 원금 보증하였으나 이후 연금수령층액 보증형, 일부인출 해약공제면제형 등 다양한 변액연금 상품이 소개되었다(생명보험협회 2012). 이에 따라 특별계정 잔고는 2001년 1,500억 엔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15조 7,700억 엔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1980년대 말 경험으로 인해 변액연금을 설계사 채널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에서도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다이이치 생명보험회사는 다이이치프런티어 생명보험회사를 은행창구를 통한 연금전문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몇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일본 변액연금시장에서 철수하였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판매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위험을 관리하였다.

〈그림 III-16〉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조 엔)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한편,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2010년대 들어 단카이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납 개인연금 유치를 강화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톤틴성⁶⁸⁾을 강화하고 해약환급(사망환급)을 낮게 설정하며, 연금액을 확대한 종신연금 등이 출시되었다.

다. 건강보장 강화

공적보장 축소로 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은퇴 시기가 도달한 연령의 경우 노후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해졌다. 젊은 세대 역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단독의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동 규제가 철폐되면서 시장에 진입하였다.

일본의 의료보험시장은 공공부문의 높은 보장률로 인해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을 보완해 주는 실손형 대신 소득보전 목적의 정액형⁶⁹⁾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⁷⁰⁾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율이 1990년대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났으나,⁷¹⁾ 환자 부담에 대한 1인별 한도(월 평균 8~9만 엔)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개인 부담률은 15.5% 수준이다.

일본의 의료보험시장은 제3분야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생명, 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이 가능하며 생보사의 종신의료, 암, 개호보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2001년 이후 의료보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

68) 17세기 이탈리아의 Lorenzo Tonti에 의해 창안된 연금제도를 말함. 대중의 소구좌 출자로 대량의 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출자자를 연령별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정한 일정액(출자금에 대한 일정금액)을 매년 지급하고, 이를 그룹의 생존자 간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됨. 따라서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생존자가 가져갈 연금은 많아지고 최후까지 남은 사람은 그 당시 사망자 취득분을 모두 받게 됨. 그러나 원금은 일체 상환되지 않고 또 그 그룹의 출자자가 전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그룹에 대한 지급을 중지함

69) 상병 발생 시 사전에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의료비 보충 및 치료기간 또는 기간 이후 소득보장 상실분에 대한 보전이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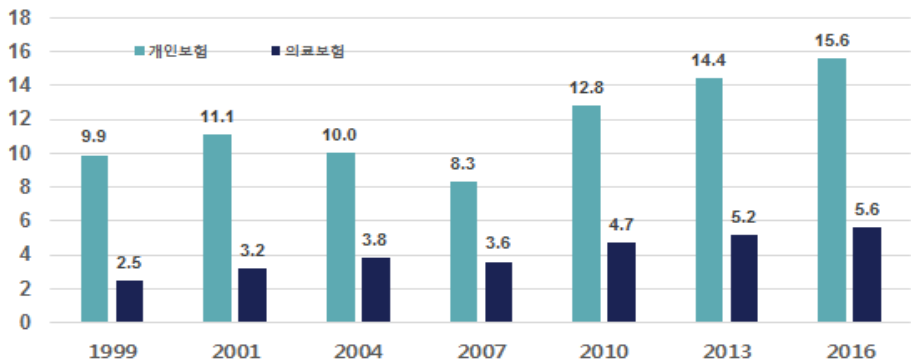
70)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비중은 56%, 공적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63.2%(2015년 63.4%)로, 민영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진료비의 자기부담(36.8%)을 보완해 주는 실손형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71) 환자 본인부담률: 1984년 → 10% → 1997년 20% → 2003년 30%

의 진입규제 철폐와 방카규제 철폐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III-17〉 참조). 의료보험 증가는 고령화, 1인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한 개인 스스로 건강을 대비하려는 니즈 및 상품 공급자 증가에 기인한다. 의료보험 상품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취업불능보험,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실비보장 유형의 보험, 불임치료를 보장 보험, 치매보험, 공적개호보험에 연동한 보험 등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실제 나이 대신 건강 진단 등의 검사 결과에 따라 산출한 건강 나이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의료보험, 고객의 건강 증진 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강증진형 의료보험 등도 개발되었다.

〈그림 III-17〉 의료보험 신계약 건수

(단위: 백만 건)



자료: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의료보험이 크게 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tomo 2007). 먼저 인구 고령화와 공적보장 축소로 인해 의료보험 수요가 확대되었다. 둘째, 입원을 중심으로 한 보장설계로 상품내용이 간단하고 보험료도 저렴하여 고객에 접근이 용이하였다. 셋째, 입원율은 정부차원에서 입원 일수 축소 정책의 영향으로 안정적이었다. 넷째, 재무건전성 확보가 계약자보호라는 인식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과 별도의 준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생존담보에 대한 장기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험률 산출 시 40~50% 수준의 안전할증과 추세 반영이 허용되었다. 다섯째,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급부의 리스크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의료보험의 경우 리스크가 적은 반면 수익성

이 높아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일본 사망보험의 사차익률이 30% 수준인 데 반해 의료보험의 사차익률은 40~50%에 달한다(생명보험협회 2012).

라. 중장기적 대응

물론 경기가 장기간 부진함에 따라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상품, 시스템, 판매채널 전반에 걸쳐 변화 노력을 지속하였다.⁷²⁾

〈그림 III-18〉 일본생명 경영전략 변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경영 목표	• 경영환경 악화 대응 - 비용 절감 - 재무건전성 제고	• 수익성 중심 경영 - 경쟁력 제고 - 사업구조조정	• 국내외 성장성/수익성 제고 - 해외진출 확대
상품	• 고객 사망보장 주력 • 고금리 상품 계약 전환	• 종합보장형 통합보험 주력 • 건강보험 수요 증가 대응	• 상품구조 혁신 • 고객 이탈 방지 • 신규고객 확보
채널	• 고능률 조직 유지 • 타겟고객군별 채널 다양화	• 전속채널 축소 - 생산성 강화 주력 • 비전속채널 확대	• 전속채널 고능률화 • 비전속채널 강화
자산 운용	• 자산운용리스크 관리 강화 - 채권 확대, 주식/대출 축소	• 수익성 제고 - 해외투자 확대 - 국내의 자산운용사 설립	• 해외투자 운용수익 제고
해외 사업	• 미국,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진출	• 선진사 업무제휴 관계 구축 - 전략적 자본출자/투자	• 선진사에 전략적 투자 및 M&A • 아시아 진출

자료: 일본생명(日本生命), 『연차보고서』 각호

예를 들면, 일본생명의 경우(〈그림 III-18〉 참조)⁷³⁾ 1990년대는 버블 붕괴, 이차역마진, 금융위기 등 경영환경 악화 대응하여 재무 건전성을 가장 중시하였고, 이를 위해 사망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고금리상품의 계약전환을 추진하였다. 자산운용

72) 内野逸勢·菅谷 幸一(2014)

73) 일본생명(日本生命), 『연차보고서』 각호를 참조하였음

도 주식과 대출을 축소하고 채권을 확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수익성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금융규제 완화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생·손보 통합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의료보험수요 증가에 대응하였다. 판매채널 다각화에 따라 전속채널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전속채널의 생산성 강화에 노력하고 비전속채널을 확대해갔다.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선진 보험회사와 업무 제휴 관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형성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축소에 대응하여 상품구조를 혁신하고, 고객이탈을 방지하며 신규고객 확보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전속채널을 고능률화하고 비전속채널을 강화하였다. 해외투자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그림 III-19〉 다이이치 생명 경영전략 변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경영 목표	• 경영환경 악화 대응 - 비용 절감 - 재무건전성 제고	• 경영 효율화 • 미래성장동력 확보	• 외형 확대 - 의료보험 소형사 인수 - 해외 M&A
상품	• 양로->시망보장 전환 • 고급리 상품 계약 전환	• 의료보험 공급 확대 -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대응	• 보장성 중심 • 연금판매 강화
채널	• 영업조직 효율화 - FC 축소 - 점포 통합	• 신계약 중심에서 효율중시 영업체제로 전환	• FC 고능률화 - 타채널과 시너지 제고 - 방카 확대 및 GA 강화
자산 운용	• ALM 도입 - 채권 확대, 주식/대출 축소	• 채권중심 운용 - 장기채 및 해외채권 확대	• 국내외 자산운용사업 강화
해외 사업	• 해외거점 운영 - 선진시장 조사	• 해외영업 시작 - 아시아 이머징 시장 중심	• 해외영업 본격화 - 아시아 진출 확대 - 선진사 M&A

자료: 다이이치 생명, 『연차보고서』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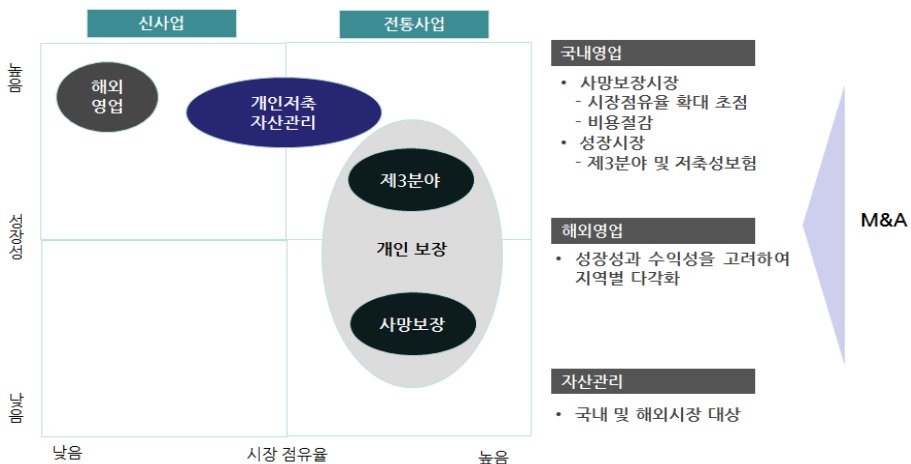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도 일본생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림 III-19〉 참조)⁷⁴⁾.

74) 다이이치 생명, 『연차보고서』 각호를 참조하였음

1990년대에는 경영환경 악화에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2000년대 들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의료보험상품 공급을 확대하였고 신계약보다는 요율을 증시하는 영업체제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낮추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외형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의료보험회사를 인수하는 한편 해외 M&A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생명과 다른 점은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다이이치 생명의 최근 외형성장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보면(〈그림 III-20〉 참조), 국내 영업과 해외영업, 그리고 자산관리업무를 3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영업의 경우 기존의 성장성이 낮은 사망보장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성장이 높은 제3분야에 대해서는 M&A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영업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역시 M&A가 전략적 수단이다.

〈그림 III-20〉 다이이치 생명의 외형성장전략



자료: Nishimura(2016)

또한 자산관리를 위해 국내와 해외영업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DIAM Asset Management와 Janus Capital Group을 각각 설립하였다. 일본 국내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저축에서 투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통화표시 ETF 등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회사 사장의 재임기간이 대략 6~7년이며, 회사 내부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여 경영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향후 과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에서 정리한 일본 보험산업 변화와 대응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uzuki(2011)는 현재와 미래 보험산업 과제의 7개 Key words를 제시하였는데, Contraction, Diversification, Simplicity, Service, IT, Ageing, Asia 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그림 III-21〉 참조), 생산가능인구 등 인구 감소로 개인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전략적 M&A가 중요시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구조 변화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보험수요가 차별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도 높아지면서 상품 및 판매채널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이 축소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품이 단순화되고 있다. 특약이 통폐합되고 주계약 결합 방식으로 상품이 설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졌다. 시장 축소로 계약자 유지가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계약자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재무관리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업무 제휴와 연계 등이 활성화되었다. IT기술 발전으로 인슈테크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인구 고령화와 공적보장 축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보험 등 제3분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 보험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림 III-21〉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현재 및 향후 과제

Contraction	Diversification	Simplicity	
•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 • 개인보험 가입금액 감소 - 최근 사망보장 감소가 생존보장 증가에 의해 상쇄 • 사업비 절감 • 전략적 M&A	• 보험수요 차별화 다양화 - 여성시장 확대 - 가구구조 변화 • 상품 및 채널 다변화 - 인터넷, 방카, 내점형 보험점포 등	• 특약 통합/ 주계약 결합 방식으로 상품 공급 •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상품 개발	
Service	IT/인슈테크	Ageing	Asia
• 계약자 유지 노력 강화 • 재무관리 등 컨설팅 능력 제고 • 업무 제휴 및 연계	• 컨설팅 등에 모바일 기기 활용 • 상품 개발에서 자산운용까지 활용 • 사업비 절감	• 시장 확대 - 종신보험, 연금 • 개호보험이 4대 주력 상품으로 성장 전망	• 인구가 증가하는 아시아 시장이 타겟

자료: Suzuki(2011) 재정리

Suzuki(2011)는 7개의 Kew words를 병렬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인구 고령화에서 파생된 관계로 보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본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이하에서는 과제 중 향후 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3개의 과제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였다.

가.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증가할 것이고 장기요양보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고령층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초고령자,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2015년 현재 7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은 75세 이상 가구 중 37%를 넘어섰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 비율도 10%를 넘었다(〈표 III-17〉, 〈표 III-18〉 참조). 이 비율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서비스도 증가할 것이다.

〈표 III-17〉 독거노인 비중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65세 이상 가구	16,200	18,887	20,060	20,154	20,111	20,215
중 1인가구	4,980	6,008	6,679	7,007	7,298	7,622
75세 이상 가구	7,308	8,815	10,231	11,867	12,208	11,736
중 1인가구	2,693	3,265	3,820	4,473	4,726	4,660
비율	36.8	37.0	37.3	37.7	38.7	39.7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7)

〈표 III-18〉 치매노인 비중

(단위: 만 명, %)

구분	2010	2012	2015	2020	2025
생활 의존도 2급 이하 치매 노인	280	305	345	410	470
65세 이상 노인 중 비율	9.5	-	10.2	11.3	12.8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7)

그러나 초고령자,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과 같은 보험계약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에 제약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고객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고령화될수록 보험의 다양한 서비스가 보다 더 필요하다.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만기에 따른 만기환급금 지급, 개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고령계약자 만족을 위해 생명보험 계약을 3단계로 구분하여 주요 요소별로 필요한 조치를 정리한 고령계약자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7). 1단계: 상품구매단계, 2단계: 계약유지단계, 3단계: 보험금

지급단계로 구분하여 고령계약자들이 보험상품을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까지의 과정을 세분화하고 고령계약자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최근에 소개된 마이넘버⁷⁵⁾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5). 마이넘버를 활용함으로써 계약자의 사망 유무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요정보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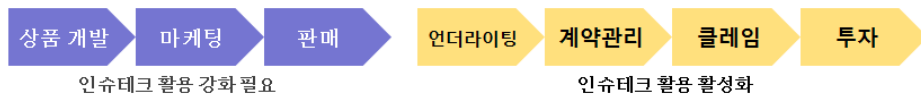
한편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보험(Longevity Pension) 개발을 주장하였다(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2015). 개인안심보험이란 평생 동안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과 연계한 종신연금보험인데,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 인슈테크 활용

일본 보험회사들은 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상품 상담(보험로봇어드바이저),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 활용 영역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라이팅, 계약관리, 클레임, 투자 등 보험회사 가치창출 흐름(Value Chain)의 후반부에 인슈테크가 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개발, 마케팅, 판매 등 가치창출 흐름의 전반부에도 인슈테크의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I-22) 참조).

〈그림 III-22〉 보험회사 가치창출(Value Chain)과 인슈테크 도입 현황



자료: 佐々木学(2016)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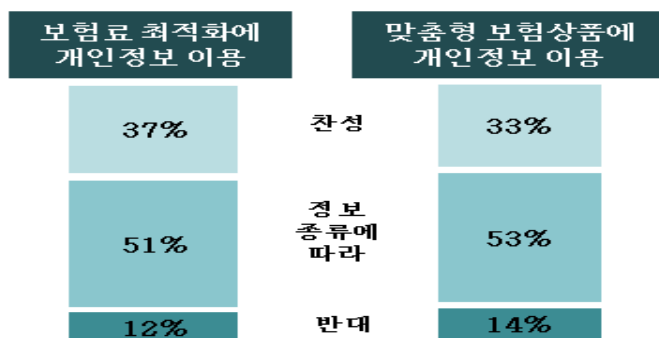
75)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으나 2016년 1월에 마이넘버카드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통지하였음. 보조금 지급을 위한 소득확인, 생존확인 등의 사무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마이넘버를 도입하였으나 국민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에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마케팅 등에서도 인슈테크를 도입하고 있다. 악사다이렉트는 인공지능 Pepper를 도입하여 얼굴 인증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적합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생명은 스마트폰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얼굴 인증만으로 고객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 채널의 등장으로 보험판매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고객에 대응함으로써 기존의 대면채널 비중은 서서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IT기술 발달과 함께 의학기술 발달도 보험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되어 이에 맞추어 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과 상품 개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⁷⁶⁾ 특히, 일본 소비자들은 보험회사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그림 III-23〉 참조) 앞으로 인슈테크를 활용한 상품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23〉 Accenture 설문조사 결과(2013년)



자료: Accenture(2013)

76) 田畑 康人·岡村 国和(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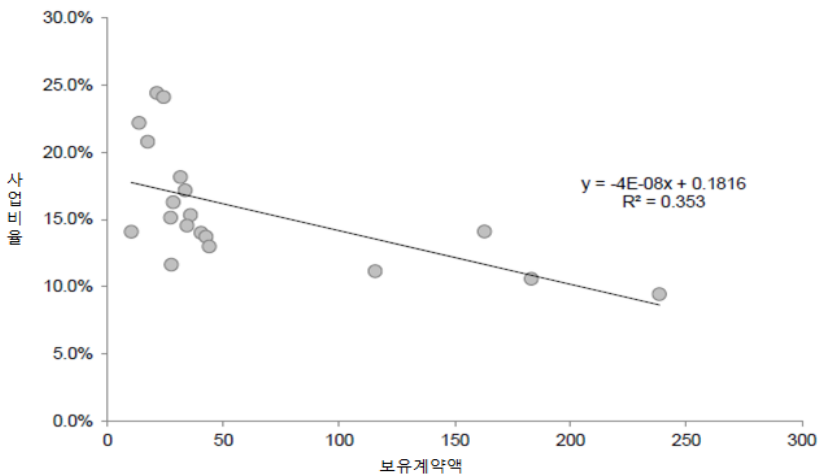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 암보험, 변액보험 등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편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IT를 이용하여 고객과 직접 소통하게 될 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현재 보험회사의 수익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위험률차익에서 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한지 점검하고 새로운 수익구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 M&A 및 해외진출

생명보험산업은 규모의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 제조업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더라도 원가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유계약액이 큰 회사일수록 사업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24〉 참조).

〈그림 III-24〉 일본생명보험회사 보유계약액과 사업비율(2016년 3월)

(단위: 조 엔)



자료: 内野逸勢(2017), “20年後の生命保険業界の行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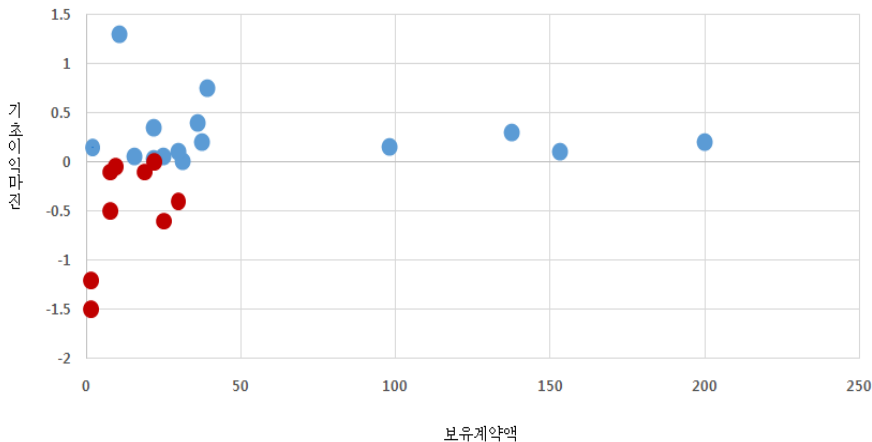
현재 일본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일본 국내시장 축소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회사 규모 확대를 통해 사업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약자 리스크를 인수하고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은 보험회사가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유계약액 확대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들의 향후 이익 흐름을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보유계약액이 100조 엔 이상인 회사는 모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흑자가 나는 회사도 있으나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도 존재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25) 참조). 100조 엔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에 따른 업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III-25〉 보유계약규모와 수익성과의 관계

(단위: %, 조 엔)



주: 향후 20년 이내 시장구조를 예측하여 추정함
 자료: 内野逸勢(2017), “20年後の生命保険業界の行方”

그러나 보험회사들 모두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M&A를 통한 것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현재 일본에서 40여개 생명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보유계약규모가 약 1,000조 엔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M&A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M&A가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 M&A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해외진출을 통하여 궁극적인 해결책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동경해상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의 40%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M&A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후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현재 일본 보험산업이 직면하는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구도 10년 이내에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만을 경험했던 우리 보험산업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보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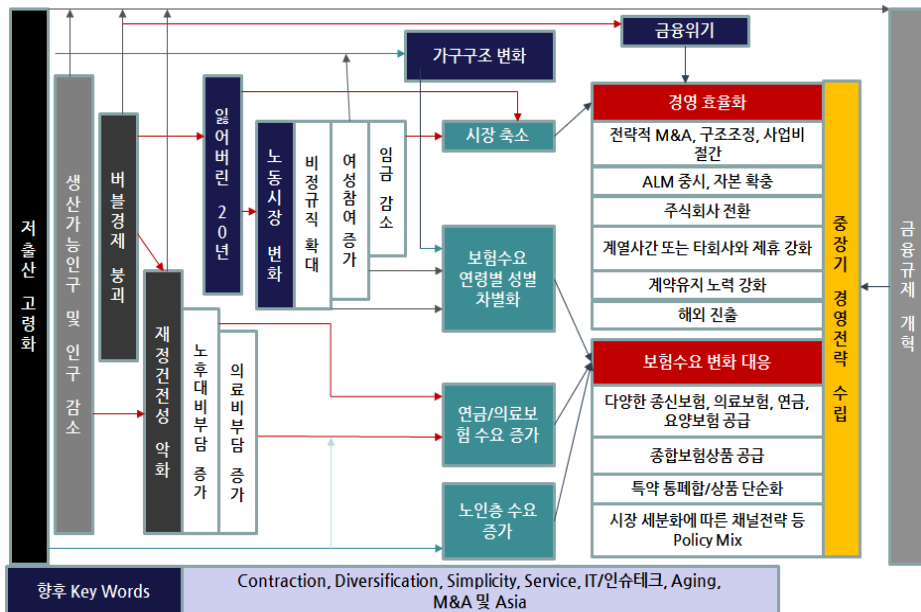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우리보다 인구 고령화가 앞선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을 평가하고 실패와 성공 사례 등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일본의 문헌에서도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 사례를 제외하고 일본 보험산업 변화에 대한 평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등 일본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1995년의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다. 1995년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일본 보험산업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는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버블 붕괴 등의 환경 변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보험수요 위축과 보험수요 차별화 및 세분화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시장이 축소되었다. 보험가입률, 가입규모, 수입보험료 등이 모두 줄어들었다. 둘째, 미혼 및 만혼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구구조 변화로 보험수요가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차별화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사망보장 수요에서 여성은 의료보험(민영건강보험), 연금 등 본인보장 수요로, 청년층은 의료보험 등

본인보장 수요로, 중장년 남성은 사망보험 등 가족보장 수요로, 노인층은 연금, 의료보험, 요양보험 등 노후보장 수요로 보험수요가 세분화되었다. 셋째, 재정 부담으로 공적 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보장이 줄어들자 개인연금과 의료보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넷째, 노인인구 증가와 이들의 자산여력으로 노인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60대 이상 노인층이 가계 금융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다섯째, 경기가 장기간 부진하고, 임금이 감소하며,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보험수요 변화에 대해 일본 보험산업은 소비자 선호에 맞게 연금과 의료보험 상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상품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채널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약을 통폐합하는 등 상품을 단순화하였다. 정부도 상품 및 가격 규제, 업무영역 및 진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주었다(그림 IV-1) 참조).

〈그림 IV-1〉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또한 일본 보험산업은 시장 축소와 자산가격 거품 붕괴 등 경영환경 악화로부터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M&A 및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 후순위채 발행, 주식회사 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고, 해외진출도 본격화하였다. 정부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주었다.

보험산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보험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수요 변화 및 사회보장 축소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보험산업도 시장 축소와 보험수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품 개발, 판매채널, 자본 확충, 비용 절감, M&A, 해외 진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도 시장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현(2016),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6-38호』, 한국은행
- 고용부(2017), 「2016~2026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
- 김명중(2012), 「일본 기업연금제도의 현상과 개혁 전망: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의 동향 및 유식자회의의 토의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9월호, 노동연구원
- 김양희·김은지(2010), 「고령화·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지역연구시리즈』, 1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류성경(2007), 「고령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일본 금융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vol. 9, no. 3
- 보험연구소(2008), 「일본 판매채널 Trend」, mimeo
-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 생명보험협회(2012), 「일본 생명보험 상품 및 제도 연구」
- 윤경수·차재훈·박소희·강선영(2017),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2017-31, 한국은행
- 윤성훈·한성원(2018), 「아베노믹스 5년이 평가와 일본 생명보험시장 변화의 특징」, 『KIRI 리포트』, 제446호, 보험연구원
- 이기형·장기중(1998),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Insurance Business Report』, 통권 제7호, 보험연구소
- 이상우·오병국(2012), 『일본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2-2, 보험연구원
- 이윤호(2017), 「일본생명보험판매채널 현황에 대한 소고」, 월간생명보험
- 이창우·이상우(2010),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0-3, 보험연구원
- 이태열·김해식·김현경(2016), 『해외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조

사보고서, 2016-7, 보험연구원

전용식·윤성훈·채원영(2014),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조사보고서, 2014-6, 보험연구원

조용운(2018),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베트남 진출전략”, KIRI 심포지엄 제8회 발표자료
최병호·한동운·이정우·이건세·신현웅·선우덕·배성일(2005),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한낙현·김도훈·이규훈(2006), 『일본의 보험제도』, 우용출판사

다이이치 생명, 『연차보고서』 각호

일본 內閣部(2000), “人口減少下の經濟に關する研究”, 中間報告書

일본 생명(日本生命), 『연차보고서』 각호

일본 총무성(2017), “Statistical Handbook of Japan”

金鎔(2017), “規制緩和と生命保險マーケティングのイノベーション”, 保險學雜誌 第639号

_____(2013), “規制緩和が生命保險業に与えた影響に關する一考察”, 生命保險論集 第185号

村上賢二(2014), “2025年における民間保險の役割”, 株式會社きんざい

田畑 康人·岡村 国和(2011), “人口減少時代の保險業”, 慶應義塾保險学会叢書

内野逸勢(2017), “20年後の生命保險業界の行方”, 大和総研

内野逸勢·菅谷 幸一(2014), “日本の生命保險業界の現状”, 大和総研

武田久義(2008), “生命保險會社の經營破綻”, 成文堂

佐々木学(2016), “保險領域におけるFinTechの動向”, 野村総合研究所

米山高生(2009), “戦後型保險システムの轉換— 生命保險の自由化とは何だったのか?”, 保險學論集 第604号

日本 生命保險協會, 日本 生命保險協會 100年史

Accenture(2013), “As consumers change, insurers need to change too”, based on a survey of 500 Japanese insurance policy holders

APEC(2017), “Japan: financial services sector reform”, Economic Committe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ronson, B.(2011), "Reassessment of Japan's big bang financial regulatory reform", *IMES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11-E-19
- Bloom, D., Canning, D., Sevilla, J.(2001), "Economic growth and the demographic transition", NBER Working Papers
- Bloom, D., and Luca, D.(2016), "The global demography of aging: facts, explanations, and future", *Economics of Population Ageing* edited by John Piggott and Alan Woodland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0), "Japan's landmark financial deregulation: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 Costa, D.(1997), "Displacing the family: union army pensions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vol. 105, no. 6
-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2014), *Investor Presentation: Sales Channel Strategies*
- Deckle, R.(1991), "Comment in Paul Krugman", *Trade with Japan: has the door opened wide?*, Chicago press
- Engelhardt, Gruber, J., and Perry, C.(2005), "Social security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evidence from the social security notch",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0, no. 2
- Fougere, M. and Merette, M.(1999), "Populations ageing and economic growth in seven OECD countries", *Economic Modelling*, vol. 16, no. 3
- Fukao, M.(2004), "Fixing Japanese life insurance companies", The US-Japan conference on the 'solution for the Japanese economy'
- Hoiruchi, A.(1999), *Japanese economy and financial crisis*, Tokyo: Iwanami Shoten
- Hoshi, T. and Patrick, H.(2000), *Crisis and change in the Japanese financial system*, Kluwer Academic Publishers
- Ikemoto, A., and Saita, S.(2009), "Past steps and current topics of life insurance

- industry in Japan”, The Dai-ichi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 Ikeo, K.(1995), “An alarm to the financial industry”, Tokyo Keizai Shinpo Sha
- Ishii, H.(2010), “The trends of life insurance industry”, OLIS 2010 Autumn Seminar
- Ito, T., and Melvin, M.(1999), “Japan’s big bang and the transformation of financial markets”, NBER Working Paper
- Japan post insurance(2017), “Management strategy of Japan post insurance”
- Jiang, Y.(2016), *Demographic changes in life insurance business in Japan*, Japan Insurance Report, OLIS
- _____(2015), *Product transitions in Japanese life insurance market*, Japan Insurance Report, OLIS
- _____(2013), *Life insurance distribution systems in Japanese market*, Japan Insurance Report, OLIS
- Konishi, M., Okuyama, E., and Yasuda, Y.(2016), “Bank diversification into the insurance business: th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of the bank-sales channel at Japanese banks”, mimeo
- Koo, R.(2008),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 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John Wiley and Sons
- Kuga, N.(2013), *Demographic trends in Japan and the future of life insurance*, NLI Research Institute
- Malcom, J.(2001), *Financial globalisation and the opening of the Japanese economy*, Routledge
- Mankiw, G., and Weil, D.(1988),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NBER Working Paper, no. 2794
- Martines, O., Gonand, F., Antolin, P., Maisonneuve, C., and Yoo, K.(2005),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 and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420
- Naoyuki, Y.(2017), “Japan’s lost decade: causes and remedies”, edited by Naoyuki

- and Farhad(2017), *Japan's Lost Decade: Lessons for Asian Economies*
- Nishimura, K.(2016), "Corporate management strategy of a life insurance company", FALIA Invitation Seminar in Japan
- Noguchi, H.(2010), "The trend of life insurance industry", OLIS 2010 Spring Seminar
- Okayasu, T.(2016), "Life insurance products in Japan", IAV-OLIS Life Insurance Seminar
- Otomo, T.(2007), *The growth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market in Japan*, Mitsui Sumitomo Insurance Company Limited
- Sekiguchi, S.(2015), "Product strategy for the corporate market -group pension insurance-", FALIA Invitational Seminar in Japan
- Sibbitt, E.(2014), *A brave new world for M&A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Japan: Big Bang financial deregulation and the new environment for corporate combina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Penn Law: Legal Scholarship Repository
- Souma, T. and Tsutsui, Y.(2005), *Recent Competition in the Japanese Life Insurance Industry*, ISER Discussion Paper 0637,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Osaka University
- Sudo, N. and Takizuja, Y.(2018), "Population aging and the real interest rate in the last and next 50 years",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 Suzuki, K.(2011), *Present and future of Japanese life insurance industry*, Hoken-Sha
- Swiss Re(2013), *A history of insurance in Japan*
- Takahashi, W.(2011), "The Japanese financial sector's transition from high growth to the lost decades: a market economic perspective", Discussion Paper Series, Kobe University
-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2017), "Life insurance business in ageing

society”, FALIA Seminar

(2015), “Overviews of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FALIA Seminar

Toya, T.(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Japanese financial bigba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sukagoshi, Y.(2002), “Financial services sector reform in Japan”, Symposium on assessment of trade in services WTO

Urushibata, H.(2003), “The Strategies of Major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mimeo

Vlandas, T.(2016), “The political effects of aging on inflation”, *Intereconomics*, vol. 51, no. 5

Washimi, K., Inaba, H., and Imakudo, K.(2017),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ife insurers: balance-sheet differences and their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Bank of Japan Review*

WHO(2018), “Japan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 8, no. 1

Yoneyama, T.(2017), “History of life insurance business in Japan: features on industrial organization”, OLIS 50th Anniversary Life Insurance Symposium

일본 생명보험협회 통계 CD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일본 총무성, <https://data.go.jp>

통계청 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

OECD data, <https://data.oecd.org>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청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보험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
 정승연 2016.4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
 박정희·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중훈·변귀영·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
 최 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최 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5 / cbyun@kiri.or.kr)

저 자 약 력

윤 성 훈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shyun@kiri.or.kr)

김 석 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kim@kiri.or.kr)

한 성 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cindysungwon@kiri.or.kr)

손 민 속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sms27@kiri.or.kr)

연구보고서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88-6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